

UNINOMIC REVIEW

제5권 3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한국의 생존전략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원인, 영향과 함의	손경호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징과 함의	김규철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가와 전망, 그리고 한반도	박상남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국의 경제 안보 전략	주 원
우크라이나 사태와 세계질서의 재편, 한국의 대응전략	김선래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글로벌 방위산업 재편 전망과 시사점	장원준

세 종 연 구 원

UNINOMIC REVIEW

Vol.5 No.3

세 종 연 구 원

UNINOMIC REVIEW

Vol. 5 No. 3

목 차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원인·영향과 함의	손경호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징과 함의	김규철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가와 전망, 그리고 한반도	박상남
신냉전 경제 블록 시대, 한국의 경제 안보 전략	주 원
우크라이나 사태와 세계질서의 재편, 한국의 대응전략	김선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방위산업 재편 전망과 시사점	장원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원인·영향과 함의

손경호*

I.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의 원인

전쟁의 원인을 단 한 가지로 특정하여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어떤 전쟁에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이 존재한다. 제2차 세계대전을 예로 들자면, 아돌프 히틀러의 역할을 제외하고는 전쟁의 발발과 전개과정, 그리고 이 전쟁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양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누군가 전쟁을 주도적으로 시작한 것은 6·25전쟁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던 현상이다. 당시 스탈린과 마오쩌둥을 찾아가 전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원을 요구하였던 김일성의 일련의 행동이 없었더라면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전쟁에는 이러한 두드러진 개인의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대개 여러 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여 발생한다. 전쟁의 원인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한 가지는 전쟁을 환경적 요인, 구조적 요인, 그리고 촉발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환경적 요인이란 국제적인 수준의 대립적 질서와 같이 개별 국가들이 놓인 큰 틀을 의미한다. 구조적 요인이란 국가들이 적대할 수밖에 없는 지역 수준의 갈등과 국내 정치적 압력 등 보다 작은 범위나 보다 구체적인 추동력을 지닌 상황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촉발적 요인이란 직접적으로 마찰을 일으켜 전쟁에 이르게 하는 요소를 의미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위의 틀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는 전쟁이다. 이 전쟁은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전략적 경쟁 속에서 발생하였다. 중국은 경제력과 이에 따른 군사력이 신장하면서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한편, 타이완과 남중국해 문제에서 이전과 달리 점차 강압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이

* 現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
미국 Ohio State University 정치학 박사

러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추구하면서 쿼드(QUAD)를 발족시켜 중국에 대항할 지역 협력체를 건설하였으며 오커스(AUKUS)를 결성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군사행동이 가능한 조직을 출범시켰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미국이 2018년 중국에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무역전쟁을 통해 경제 분야로 확산하였으며 코로나19는 두 국가의 경쟁을 증폭시키면서 국제적 공급망의 단절과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환경은 러시아로 하여금 보다 쉽게 전쟁을 결정하도록 하였고 중국을 배경에 둬으로써 위험을 덜 수 있게 하였다.

구조적 요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충돌하게 된 보다 직접적인 원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러시아는 냉전 종식 이후 나토(NATO)의 동진에 늘 신경을 써왔다. 초기에는 나토와 협력적인 관계를 갖기도 하였으나 이것이 불가능해지자 최소한 나토의 세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하였다. 그러나 1996년에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가 나토에 가입하고 2004년에 발트해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을 비롯한 구소련권 국가 7개국이 추가로 가입하면서 나토의 영향력이 러시아에 바짝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이 발표되자 러시아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후 우크라이나에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당선되어 나토 가입 움직임은 멈추었지만, 그가 실각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다시 나토 가입을 향한 행보를 재개하였고 이는 러시아를 자극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국토를 지니고 있으며 풍부한 농산물과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로서는 나토의 동진을 막아 줄 긴요한 완충지대인 우크라이나를 확보하고 싶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우크라이나 역시 절실한 국가적 필요에 따라 나토 가입을 비롯한 친 서방 정책을 취해왔다.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은 2004년 오렌지혁명을 거치며 시민 저항운동을 경험하였으며 2013년의 유로마이단을 통해 친러 정권인 야누코비치를 퇴출시켰다. 하지만 그 여파로 러시아가 크림아를 병합하고 다수의 러시아인들이 거주하는 동부의 돈바스 지역에서 반정부 움직임을 부추겨 돈바스전쟁을 조장하였다. 우크라이나는 독자적으로 러시아의 세력을 극복할 수 없어 독일과 프랑스가 중재한 민스크협정을 체결하였으나 돈바스 지역에서 분쟁은 지속되었다.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탈 러시아로 상징되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색채가 짙은 합리주의와 개혁을 주도할 지도자로 선출되었다. 우크라이나 인들과 젤렌스키에게 있어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단순히 안전보장의 파트너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진로를 수정하고 현대화된 가치를 추구하는 민족 국가로 변모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전쟁은 푸틴의 결정에 따라 시작되었다. 푸틴이라는 개인적 요인이 전쟁을 촉발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2008년 부크레슈티에서 천명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노선이 얼마나 많은 위협이 되었든, 지난해 11월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과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선언한 미국-우크라이나 전략적 파트너십 현장이 모스크바에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이를 빌미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푸틴의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푸틴이 결정하지 않았더라면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전쟁에 적극적이었으며 크림리아와 돈바스에서 그러하였듯 무력을 사용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결국, 푸틴은 2차 체첸전쟁에서 체첸의 저항세력을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로 규정하였던 것처럼 대내적인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공격의 대상을 나치로 묘사한 “특수작전”을 시작하였다.

2. 전쟁의 양상과 관련국의 대응

푸틴이 시작한 전쟁은 그의 의도와는 무관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러시아군은 2월 24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북부 및 북동부, 동부, 그리고 남부 지역에 대한 동시 공격을 개시하였다. 국가 및 군사 시설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뒤 전차 전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대전투단을 중심으로 한 공격부대를 전격적으로 투입하였다. 물론 러시아군은 침공 이전에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을 하였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수뇌부가 국민을 버려두고 도망쳤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정보전을 수행하였다. 초기 작전의 기세는 최근 그동안 호조를 보였던 경제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군사개혁을 완료하였다고 믿어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짧은 시간에 점령하고 우크라이나 지도부를 무력화하여 새로운 정권을 세우면서 끝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은 러시아군의 부진과 더불어 사라지게 되었다.

당초 러시아군의 작전은 대규모 전력을 투입하고 보다 과감한 작전 행동을 통해서만 달성될 성질의 것이었다. 특히 강력한 군수지원 능력이 동반되어 지속적으로 전력을 보충해 주어야만 러시아군이 열어 놓은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침공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군수지원에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러시아군이 초기에 군수를 경시하였다는 것은, 러시아가 전쟁 목표를 돈바스 점령으로 한정된 뒤

이를 전적으로 지원할 철도망이 개설된 이후 군사적 성과를 올리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러시아가 동원한 대대전투단은 근본적으로 자체적인 능력이 부족하므로 우크라이나 정도의 국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보다 대규모로 부대를 조직하고 강력한 군수지원 체계를 확보하였어야 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군이 예상외로 선전하였다. 초창기 기습으로 인한 피해와 첨단무기의 열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기동화된 소규모 부대를 활용한 유연한 작전으로 러시아군의 둔중한 기갑부대를 격퇴하는 한편 주로 도시에서 전개된 시가전에서 많은 성과를 내었다. 서유럽의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군이 2014년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많은 훈련을 받았으며 소부대 지휘관들의 능력이 신장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물론 전장에서 거둔 승리에는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이 기여한 바가 크다. 그는 끊임없이 SNS를 활용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외국의 지원을 호소하면서 틈틈이 격전지를 찾아 병사들을 격려했다. 그의 지도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은 자신의 생명과 가족, 재산을 지킨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싸우는 군대로 전쟁에 임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이번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여 핵무기 보유국가가 비 핵국가와 전쟁할 때 준수해야 하는 국제적 규범을 파괴하였다. 핵비확산체제(NPT)는 이미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 비 핵국가와 전쟁을 할 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신뢰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고 있다. 하지만 푸틴은 개전초에 핵전력을 특별 전투준비태세로 전환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고 다음 날 러시아군은 이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푸틴의 핵을 사용한 협박은 직접적인 나토의 무력개입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핵 비확산체제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였고, 더불어서 재래식 전쟁 수행과 핵무기의 영향력을 함께 사용하는 “유사 핵전쟁”의 새로운 길을 열어 놓았다. 우크라이나가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를 통해 소련이 붕괴하면서 남긴 다량의 핵무기를 포기하고 안전보장을 약속받았었기에 러시아의 “유사 핵전쟁” 행태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역시 독자적인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하게 하였다.

예상하지 못하였던 전쟁의 방향은 러시아가 의도하지 않았던 서유럽 국가들의 반응을 불러왔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조기에 항복하였더라면 서구의 국가들은 러시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상태에서 전후의 질서를 모색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선전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나토

의 확장이다. 러시아의 도전적 행보가 거꾸로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두 국가가 오랫동안 소련 시기부터 중립적 입장을 지켜왔던 것을 상기해 보면 이는 극적인 변화이다. 이와 더불어 독일은 국방비를 GDP의 2%대로 증액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당장 독일은 F-35 전투기 35대를 구매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에 회원국 후보 자격을 부여하였다. 비록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는 못하였지만 비슷한 회원국 집단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에 가입함으로써 러시아와 대결하는 진영에 들어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과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나토의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전비를 지원하고 많은 양의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나토의 역할과 위상을 부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중요한 분쟁 지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전쟁 수행 방향에 대해 수시로 논의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들 국가의 수뇌부와 마리우폴과 같은 격전지의 상황을 세밀하게 나누고 있다. 네덜란드 등 다른 유럽의 국가들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정보를 공유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긴밀하게 논의해오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을 지지하며 이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젤렌스키는 매일 유럽 국가의 정상과 소통하며 그 상황을 SNS에 알려 이를 소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트위터를 보는 한, 마치 유럽의 모든 국가가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된다. 마침내 유럽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미국에 안전보장을 의존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러시아의 전쟁에서 한 발자국 거리를 두는 형국이다. 전쟁 이전 베이징올림픽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에 상한선은 없었던 중국은 러시아의 전쟁 행위로 인해 자국의 세계전략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지난 7월 푸틴의 생일에 초대된 시진핑이 국내의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국으로서는 여전히 서구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이어가야 하기에 러시아가 벌이는 전쟁, 특히 민간인을 함부로 살상하는 전쟁에 전면적으로 협력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중국은 러시아의 원유를 구매하고 러시아의 무기 제조에 필요한 반도체는 수출하는 등 자국의 실리 추구가 가능한 분야에서 그리고 전반적인 균형추가 서구에 기울지 않도록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신중하게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

하고 있다.

3.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

한반도에 전쟁이 미치는 영향은 환경적인 요인에서부터 찾아보아야 한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 관계에 긴장을 더하였다. 미국이 러시아가 유럽에서 현상을 변경하려고 한 시도를 막기 위해 노력하면서 이 노력에 동참하기를 거부했던 중국의 행보는 자연스럽게 자유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의 대결이라는 신냉전론을 확산하게 하였다. 물론 이것이 과거 냉전과 같은 이데올로기 대립과 진영 간의 결속을 동반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이 한 편에,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편에서 연대하는 양상은 분명하며 여기에 국제 공급망 이슈와 무역 마찰이 서로 얹혀 이전의 미·중 경쟁이 지니고 있던 수위를 한층 높였고 군사적 대결의 요소를 가미하게 하였다.

이러한 대결적 양상은 지구 반대편에 존재하는 타이완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 유럽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인도-태평양으로 전이하여 서로를 상대한다면 이 두 문제는 역내에 다양한 파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만일 두 국가가 서로에 대한 갈등의 수위를 고조시키면 직접적인 무력 충돌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은 동맹 관계를 통해 높은 수준의 개입을 요구받을 수 있다. 만일 미국과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울삼아 대결을 회피하고 수위를 조절한다면 이 지역의 긴장은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미국은 유럽에서 동맹과 협력관계를 활용하였던 전력을 살려 한국을 포함한 동맹 및 협력 국가가 적절한 역할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유착은 북한에 많은 활동의 자유를 부여할 것이다. 북한은 어느 한 국가의 지지를 받기만 해도 국제무대에서 활동의 폭을 넓혀 왔는데 앞으로는 두 국가가 모두 북한을 지원하는 형국이 되어 북한이 상당히 넓은 운신의 폭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유엔 안보리를 통한 북한의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당분간 곤란해질 것이며, 북한은 핵무기 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강도 높은 도발을 감행하여 무기 체계 개발을 완성해 가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푸틴이 “유사 핵전쟁”을 사용한 전례를 모방하여 핵의 그림자 아래에서 국지도발을 통해 한국에 대한 강압을 구사하려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잘 계산된 무력 도발을 자행할 수 있다.

비관적인 전망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통적인 행위자들 외에 나토가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할 수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그동안 개별적인 영향력을 확대해 왔으나 러시아와의 대결을 통해 세력이 신장하고 현대화된 전력을 갖춘 나토가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활약할 수 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는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결성된 오커스, 개별 동맹국들, 그리고 쿼드를 연계하여 중국과의 갈등, 북한의 핵 문제, 그리고 기후 문제 등 비전통 안보 분야의 문제까지 다루어 갈 가능성이 크다. 나토의 출현은 미국이 지역 전략을 구사할 때 융통성을 더해 줄 것이며 이 지역 국가들에게도 다양한 협력자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위협을 다룰 수 있는 다양한 군사협력 파트너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과의 관계는 면밀한 관리를 통해 발전시켜가야 한다. 전 지구적인 공급망과 가치사슬의 재편성은 한국에 중국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다. 권위적인 공산당의 통제 위주 경제정책 때문에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한한령과 같은 적대적인 조치로 우리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쟁에서 중국이 보여준 태도는 여전히 중국이 실리를 중시하는 노선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는 이를 감안하여 필요적 절한 수준에서 조절해 갈 필요가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하되 실질적인 협력 또한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중국과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에 급격한 군사적 대결을 초래하는 마찰은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대중국 관계의 기본이 될 것이다.

전쟁 양상의 변화를 분석하고 새로운 전쟁 방식을 수용하는 노력을 계속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과거 무조건적으로 인정해 왔던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푸틴이 돈바스에서 7년 이상 분쟁을 지속해왔다는 사실은 하이브리드전이 가진 한계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는 분명히 실패하였다. 저명한 군사전략가 로렌스 프리드만(Lawrence Freedman)은 중앙정부가 하이브리드전의 주체를 통제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때문에 일관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분석하였다(Freedman, 2022). 그동안 서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이브리드전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어왔는데 이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러시아가 실패한 정보전과 사이버전에 대한 분석 역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국군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혁신을 위한 방향성을 검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전쟁에서 다시 부각한 원칙인 군수지원 능력의 확보, 목표와 임무에 부합하는 적절한 규모의 유지, 그리고 유능한 소규모 부대 지휘관을 육성하는 것 등, 효율적인 군대가 지녀야 하는 기본적인 특성을 잘 확인하고 이를 구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더하여 우크라이나에서 주로 벌어졌던 도시지역 작전을 고찰하여 대도시가 많은 우리 작전환경에 부합한 교훈을 도출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끝으로 한국 사회가 지도자와 일반 국민, 그리고 현장의 전투원이 같은 마음이 되어 전쟁을 함께 해 가는 우크라이나의 단결을 배울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정부가 끊임없이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국민들이 열정적으로 전쟁을 지원하며, 군대가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놀라운 전쟁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Freedmand, Lawrence(2022), "Why War Fails: Russia's Invasion of Ukraine and the Limits of Military Power," *Foreign Affairs*, Vol.101, No. 4.

Abstract

Russo - Ukraine War: Causes, Effects, And Its Implications

Kyeng Ho Son

This article analyses causes, effects, and the implications of Russo - Ukraine War. The paper attempts shed light on environmental and structural factors of the war and the realities of operations in the battle fields. The war occurred in the midst of Sino - US strategic competition that enabled Russian invasion on Ukraine with the support of China. In structural sense, Russian leaders have been concerned about the expansion of NATO toward east. Specifically, Putin wanted to hold Ukraine as Russia's buffer to NATO's encroachment. However, the people of Ukraine had determined to escape from Russian influence and join the sphere of Western Europe to reform their country and achieve prosperity. The Orange Revolution and the Euromidan were the results of Ukrainian nationalism. The war proves poor military performance of Russian armed forces with less competent logistic capabilities. In contrast, Ukraine soldiers gained great success in dealing with Russian tanks with the support of NATO countries. The war will affect the situation in Indo-Pacific region either in the way of provoking conflicts or easing tension. The enhanced coalition of Russia and China, due to the effect of the war, will embolden North Korean behavior in terms of military threats including tests of Nuclear bombs and ICBMs. At the same time, NATO emerged as a new player in this region and will give more options to the U.S.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 needs to deal with China carefully to maintain stable relations. In addition, ROK military should pay attention to the lessons of the military operations of the war for the success of the ongoing reform.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징과 함의

김규철*

1. 들어가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6개월이 지났다. 대부분 전문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까지는 하지 않으리라 추측했지만, 그 추측들은 빗나갔다. 21세기에 무력에 의한 전쟁이 날 수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놀라워했다. 그러나 전쟁은 이미 예고되었다. 모든 일에는 전조(前兆)가 있듯이 러시아와 나토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첨예화했고, 뉴스에만 나지 않았을 뿐(사실은 뉴스가 나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동유럽지역에서 양측이 군사력을 운용함으로써 일촉즉발의 무력 충돌 발생 위기가 우크라이나 남부 흑해 일대에서 자주 발생했다.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 직후에 내부정치 혼란과 경제 약화로 군사력이 약화했으며,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서방의 지원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초대 대통령 엘친은 1993년 군사독트린에서 잠재적국이 없다고 선언하며 서방과 협력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과거 냉전 시대에 바르샤바조약기구와 대적하던 서방의 군사동맹체인 나토는 약속을 어기고 동진 확대를 계속했다. 과거 소련의 동맹이었던 동유럽국가들이 앞다투어 나토에 편입하자 러시아는 깊은 상실감과 함께 군사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결국 푸틴이 집권한 2000년, 군사독트린에서는 나토를 다시금 군사 위협으로 지명하면서 대비책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나토를 주도하는 미국을 최대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2006년 뮌헨에서 개최된 안보 회의에서 푸틴은 미국의 단극체제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서방에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푸틴은 현실주의와 제로섬적 사고에 기반한 대외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절대적 수단으로서 군사력을 본격적으로 증강하였다.

*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초빙연구원 및 한국국방외교협회 러시아 센터장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정치학 박사

러시아군은 2008년 조지아전에서 비록 승리하기는 했으나 전반적인 군사력 구조와 운용체제 면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사상 최대의 군 개혁을 단행했다. 150년 만에 처음 있는 대규모 개혁이었다. 현대전양상을 고려하여 기본전투 단위를 사단에서 여단으로 바꾸었으며, 무기체계 전반을 현대화하여 현대화율 70%를 달성했다. 여기에 불시 점검훈련과 실전 상황을 고려한 실전훈련 등 싸우는 방법을 완성함으로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전향적으로 바꾸어 군사력의 재조형을 이뤄냈다. 현대화된 군사력을 이용하여 2014년에 크림반도를 무혈로 반환시켰으며 2015년부터는 시리아에서 소위 이슬람국가(IS)를 성공적으로 격멸하여 국제적 테러 위협을 제거하였다.

현대화에 성공한 러시아군은 국익 실현을 위한 최대의 수단으로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품게 되었으며, 푸틴은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우리의 말을 들으라"며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이익을 내세우는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세계정세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 세계의 생활방식과 국제관계는 지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전반적으로 세계화 추세보다 지역적 고립주의 성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러시아는 2021년 세계 안보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는 것을 체감하고 기민하게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했다. 러시아의 국가안보전략은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세계질서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현대 세계가 변혁의 시기(period of transformation)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방어에 있어서는 미국·NATO를 최대의 군사 위협으로 보고 적극적인 대응 태세를 강조하였다. 러시아는 NATO 확대가 '안보 불가분의 원칙'(The principle of indivisible security)을 어기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는 자신의 안보를 위해 타국의 안보를 손상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러시아의 안보이론의 핵심을 이루는 원칙이다. 즉, NATO 또는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안보를 위해 러시아의 안보를 손상하면 안 되며, 모두가 안전한 상태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전략적 안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또한, 외국 거주 자국민 보호를 주요 국방과제에 포함했다. 이러한 강조점들은 결국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연결되었다.

전쟁은 비록 동유럽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그 여파는 동북아 및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안보 구조와 경제 분야에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는 정치적으로는 러시아를 비판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가 그룹과 단합하면서도 에너지자원 및 부품, 농산물 등 각종 물자의 수입선 보호 및 유지를 위한 실용주의적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미일 對 러중의 대립구조가 더욱 확연해지면서 동북아

및 한반도 주변에서도 군비경쟁 심화와 무력 분쟁 발생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반도가 미·중·러·일 등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주변 안보 상황에 대해 이해하는 일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다. 미·러 대결 상황은 유럽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강대국 간 갈등을 이용하여 북한이 완전한 핵무장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및 에너지 수입선 전환에 따라 아시아 지역이 더욱 치열한 국익 각축장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때,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과 주요 특징을 면밀히 연구하여 타산지석으로 삼고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 가능한 무력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경과를 살펴보면서 주요한 특징을 식별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안보상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원인 및 경과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원인

러시아의 침공 원인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첫째, 2월 24일부터 시작한 ‘돈바스 주민 보호를 위한 특수군사작전’이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우크라이나 침공의 직접적인 원인과 목적은 돈바스 주민 보호 또는 돈바스 지역의 해방이다. 돈바스 지역의 루한스크 및 도네츠크 공화국은 2014년 크림공화국의 성공적인 러시아 편입을 목격하고 크림공화국과 같은 길을 걷고자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강경진압에 따라 무력투쟁 상황이 지속되고 정전협정(민스크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무력충돌 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돈바스 주민 14,000명이 희생하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협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최종적으로 돈바스 2개 공화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면서 러시아군을 투입하게 되었다. 이번 작전에서는 2개 공화국 지역 내에 있는 아조우 부대를 격멸하고 행정구역 전체 지역을 완전히 해방하기 위해 자체 인민경찰대와 러시아군이 합동으로 공격하고 있다(김규철, 2022).

둘째, NATO의 동진 확대에 대한 뿌리 깊은 위협인식이다. 러시아는 미국이 1989년 독일 통일을 위한 협상에서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독일 통일을 용인하는 조건으로 NATO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Mary Elise Sarotte, 2014). 최근 푸틴 러시아는 NATO에 대하여 동진 확대 중지를 문서로 약속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나토의 문호개방원칙을 주장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헌법에까지 명시하며 NATO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가 소연방의 해체로 인해 잃어버린 자국 영토의 일부로서 안보를 위해 반드시 보전해야 할 완충지대라고 여전히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없이 유라시아의 강대국이 될 수 없다.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배력을 회복하게 되면, 4,200만 명의 인구와 주요한 지하자원, 흑해로 통하는 길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다시금 유럽에서 아시아에 이르는 제국 국가가 될 수 있다(브레진스키, 2000). 러시아는 공격적 의미에서 우크라이나 전체에 대한 영향권 확보를 추구할 수도 있겠지만, 방어적 의미에서 최소한 미국이나 NATO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셋째, 강대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 요구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자국의 안보를 넘어 세계적 강대국으로서 유럽의 안보 질서를 러시아에 유리하게 재형성하려는 의지의 발로로 볼 수 있다. 러시아는 2021년 12월 미국과 NATO에 각각 안보 제안서를 보냈다. 주요 내용은 ① NATO가 우크라이나를 포함하여 구소련 국가들에 회원국 자격을 부여하지 말 것, ② 러시아-NATO 협정을 체결했던 1997년 수준으로 NATO의 군사력 배치를 되돌릴 것, ③ 러시아 고유 세력권인 CIS 지역에 무기 지원 금지 및 군사기지를 설치하지 말 것 등이었다. 미국 및 NATO는 한 달 후 이에 서면 답변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전반적으로 러시아의 제안대로 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대화를 통해 차후에 해결하자는 논조로 작성되었다(김규철, 2022). 러시아는 미국의 답변에서 자국의 안보 제안이 무시당하고 있으며,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에 돈바스 지역 문제의 해결 의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도네츠크 공화국과 루한스크 공화국을 독립국으로 승인한다고 선포하고, 이어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했다.

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경과

전쟁 양상은 전형적인 재래식 전쟁의 모습과 첨단기술을 사용하는 현대식 전쟁의 모습이 혼합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보전과 심리전(여론전), 전자전 양상이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전투상황과 피해평가를 기초로 한 정확한 전황 파악에 혼선이 야기되고 있으며, 매스컴만 보고 있으면 누가 승리하고 있는지 평가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을 파괴하여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켰다고 과장된 발표를 했고, 러시아는 이를 반박하고 있다. 외국 군사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력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러시아가 단기간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점령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키이우 점령이 이루어지지 않자, 서방 언론은 우크라이나의 성공

적인 방어로 러시아가 대량 피해를 보며 작전이 실패했다고 보도하였다.

<그림 2-1> 러시아군 공격 상황*



자료: 영국 국방부

그러나 작전에서 누가 승리하고 있는지는 작전상황도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영국 국방성이 분석한 상황도를 보자. 초기 러시아군의 공격은 크게 3개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북부에서는 대도시 키이우(수도)와 하르키우 공격을 진행했다. 이 방면에서는 조공 부대를 투입하여 수도 키이우 점령에 대한 두려움을 초래하여 우크라이나 지도부의 주의를 전환하였으며, 이를 통해 병력을 고착건제하여 돈바스 방향으로 예비대 투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조공 부대가 키이우 방향으로 이동하며 주의를 끌고 있는 사이에 동부의 돈바스 지역 2개 공화국은 서쪽으로 진격하면서 점령지역을 신속히 확대하였다. 루한스크 공화국은 초기에 루한스크 주의 41%를 점령하고 있었으나 8월 기준 거의 전 지역을 장악하고 있으며, 도네츠크 공화국은 초기의 32%에서 현재까지 60% 이상을 장악했다. 남부는 흑해 연안에서 북쪽으로 공격하여 헤르손 점령을 완료했으며,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의 연결선 상에 있는 마리우폴도 점령하였다. 특히, 마리우폴에 있는 ‘아조우스탈’ 제철공장에서 저항하던 ‘아조우부대’는 3개월 만에 2,439명 전원이 투항함으로써 러시아군은 다른 지역에서 본격적인 포위섬멸 작전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우크라이나군은 돈바스 전 지역에서 근위수비대인 ‘아조

* 8월 18일 기준. 붉은 표시가 점령지역임

우부대'가 저항하고 있으나 다수 부대가 포위를 당한 상태에서 전투력이 약화하고 있다. 3월 25일 러시아 국방부의 1차 작전 결과 발표와 그 이후 매일 시행한 발표를 종합해보면, 우크라이나의 해·공군은 거의 전멸했으며, 지상군도 24개 이상의 연합부대(사단/여단급)가 소멸하였다. 이에 따라 8월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전적으로 외국의 지원에 의존하여 방어를 하고 있다.

<표 2-1> 우크라이나군 피해 현황 (러시아 발표, 3.25, 8월 20일)

구분	최초보유(2.24)	피해현황(3.25)	피해현황(7.5)	비고
병력(돈바스)	59,300명	16,000명	전원 피해(추정)	전체 26만명
전차 및 장갑차	2,416대	1,587대	4,354대	자국무기 거의 소진, 외국지원무기로 전투 실시
대포 및 박격포	1,509문	636문	3,320	
다연장포	535문	163문	809문	
항공기	152대	112대	267대	
헬기	149대	75대	148대	
무인기	36대	35대	1,776대	
방공포	180문	148문	367문	

자료: МинОбороны России 페이스북(검색일: 2022.08.20).

외국 전문가들은 현저한 군사력 우세를 점유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를 신속히 점령하지 못한 데다가 기갑 및 기계화부대의 피해 속출 및 기동 속도 지연, 장성 계급 지휘관을 비롯한 병력의 대량 손실 등을 이유로 러시아의 전쟁을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더하여 푸틴 대통령의 질병으로 판단력 약화를 언급하고 심지어 쿠데타 가능성까지 언급하였다. 그러나 언론에 수시로 노출되는 러시아 지도부의 활동과 러시아 측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보면, 자국의 작전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상황도에서 보는 것처럼 점령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전사한 것으로 알려진 장성 지휘관이 여전히 생존하여 활동하는 사례도 있어 우크라이나군 발표의 부정확성이 노출되고 있다.

여론 및 선전 측면에서 러시아의 발표보다 서방 언론의 발표를 맹신함에 따라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확한 상황 평가 및 교훈 도출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의 군사력을 오판할 때 제3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할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전쟁이 양국 너머로 확산할 수도 있다. 이에 일반적 평가에 대해 몇 가지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는 ‘전쟁’을 하지 않고 돈바스 주민 보호를 위한 ‘특수작전’을 하고 있다. 서방은 이를 간과하고 전쟁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적절하지 않은 분석을 내놓

고 있다. 러시아는 원칙적으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된 표적에 대해 타격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작전 속도가 비교적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군은 원칙적으로 선량한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금지하고 있으며, 오직 우크라이나군의 병력과 시설 위주로 타격하고 있다. 부차 민간인 학살 등에 관한 내용은 UN 등 국제기관이 조사를 하고 있고, 러시아는 자신의 학살 행동을 부인하고 있다. 지휘부의 지시를 예하 부대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기본적인 러시아군의 작전개념은 민간인 피해를 억제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작전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러시아 지도부는 발표하고 있다. 일부 예하 부대의 일탈 행동이 있을지언정 대부분의 군사행동은 지도부의 개념을 따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러시아의 작전목적은 돈바스 지역 주민 보호가 최우선이며, 기타 지역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개념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러한 작전목적은 2월 24일 작전 초기부터 공식적으로 발표했다(크렘린, 2022.2.24.). 그러나 서방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작전 목표를 “속전속결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축출한 뒤 친러 정권을 수립하여 사실상 속국으로 만드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러시아는 작전 개시 한 달 후인 3월 25일 제1단계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이후 돈바스 작전에 집중한다고 발표하자, 서방 전문가들은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지 않고 “작전이 여의치 않자 러시아가 출구전략을 위해 작전 목표를 축소 조정했다”라고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였다. 수도 키이우의 예를 들면, 러시아는 애초부터 대도시 점령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며, 전문가들도 대도시 점령에는 수많은 시간과 병력이 필요하기에 단지 봉쇄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키이우는 면적이 840km²로서 한국의 서울 600km²보다 훨씬 광대한 인구 밀집 지역이며, 이를 단기간에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크라이나군도 규모 면에서는 러시아에 비해 열등하지만, 지난 8년간 NATO와 협력하면서 서구식 편제와 서구식 훈련을 지속해서 받아왔음을 러시아는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키이우 방향으로 투입된 부대는 동부군관구 소속으로서 2월 10일부터 20일까지 벨라루스와 연합훈련을 실시한 부대였다. 이 부대는 시베리아와 연해주 일대에서 장거리를 이동하여 연합훈련을 실시한 후 복귀하지 않고 있다가 투입했으며, 현지 지형을 잘 알지 못하는 부대이다. 투입부대의 소속만으로도 주공 부대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키이우 방향은 투입부대(동부군관구)와 지리적 특징(대도시) 등을 고려할 때 점령을 시도하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셋째, 미국의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소위 ‘대대전술그룹(BTG)’을 편성하여 증강된 대대를 작전의 기본단위로 하는 공격작전으로 진행함으로써 중심 깊은 제병협동작전과 병참 지원에 실패하여 공격에 실패했다고 분석을 했다. 그러나 이는 정형화된 모델을 기초로 위계임을 하는 데 익숙한 서방의 사고방식이다.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에서 대대전술그룹을 운용한 사례는 있지만 그러한 편성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러시아군 총참모장 게라시모프 대장은 “모든 전쟁은 각각 독립된 사례로서 각자 특유의 논리와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다(Герасимов, 2013). 그의 논리는 “한번 승리한 방법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손자병법의 전승불복(戰勝不復)과 일치하며, 실제로 러시아가 수행한 조지아 평화강요작전, 크림합병 특수작전, 시리아 IS 격멸작전 등 모든 작전의 형태는 당시 상황과 지역 및 시기 등 작전환경에 따라 각각 달리 운용했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특수군사작전’에 대한 국방부의 브리핑에서도 대대전술그룹을 언급한 적이 없으며, 2008년 군개혁 시 대부분의 사단급 부대를 해체하고 여단급 상비부대를 전투의 기본단위로 개편한 이후 현재까지 다른 변화는 없다.

넷째, 서방은 러시아군의 열악한 보급 사정을 자주 거론하고 있다. 이는 일부 부대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전투식량이 발견된 이후 확산하였으나 부분적 사례를 일반화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다.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은 물론이고 키이우, 체르니이우, 하르키우, 마리우폴 등 전 지역에서 점령지역이 확보되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러시아는 3월 초부터 8월 현재까지 점령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생필품과 의약품 지급, 의료봉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www.telegra.ph). 전방에서는 전투를 하면서, 후방에서는 민사활동을 하고 있는바, 이는 보급품이 부족하면 할 수 없는 활동이다.

3.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요 특징

전쟁의 특징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범주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시각이나 전문가에 따라 실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특이한 전쟁이다. 러시아의 전쟁 명분을 비롯하여 작전 성격, 작전 수단 및 방법 등에서 과거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띠고 있다.

1) 전쟁 명분

우선 전쟁 명분 차원에서 러시아는 ‘특수군사작전’이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공격과

핵무기 개발 등 위협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적시적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크렘린, 2022.5.9.). 러시아의 전쟁 목적은 인종학살을 당하는 돈바스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며, 안보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지역 안전보장을 이룩하는 것이다. 나토 확대를 중지하고 구소련 공간에 대해 나토 군사력 설치를 중지하라는 주장은 약 20년에 걸친 러시아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러시아는 미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작전 성격

전쟁은 첫째, 총력전의 모습을 보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은 자신의 정치, 경제, 군사, 기타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 작전에 임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군사력의 상대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지원을 받아 가며 방어를 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제재를 가하며 러시아의 전쟁 지속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주력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전쟁 개시 6개월이 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은 거의 소진되었으며, 외국 지원 무기 및 물자를 이용하여 전쟁을 지속하고 있으나, 사상자 증가, 국내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시설 파괴, 유류 부족 등 어려움에 처해있다. 반면,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원유 및 가스 수출로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루블화가 강세를 유지하는 등 별다른 곤란을 겪지 않고 있다. 특히, 대규모 화력전을 지속하기 위한 방위산업도 우크라이나의 포격을 받지 않는 가운데 생산활동을 유지하고 있어 전쟁지속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전쟁은 영토쟁탈전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전까지 군사전문가들이 생각한 현대전은 과거와 달리 영토쟁탈전 양상을 떠나 상대국의 경제 및 정치체제를 파괴하여 굴복을 받아내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형태였다(Слипченко, 2002).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는 지역 내 주민들을 해방하고 ‘아조우 연대’를 격멸하기 위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8월 말 현재 돈바스 지역 대부분을 점령하고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연결하는 육상 벨트를 형성했으며, 점령한 지역에서는 민사작전과 함께 군정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영토 확보를 위한 전쟁은 21세기에도 유효하며, 특히 영토분쟁 지역이 산재해있는 동북아에서도 영토 확보를 위한 전쟁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현대전의 절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가전이다. 대부분 지역은 크고

작은 시가지로 형성되어 있어 건물 지역 작전은 필수적이며, 이는 작전 기간을 장기화하는 요소가 된다. 우크라이나군은 키이우 일대에서 러시아 통신을 감청하고 드론을 이용한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러시아군의 기동부대를 기습하여 대량 피해를 발생시켰다. 러시아는 키이우와 같은 대도시는 직접 점령보다 우회 및 봉쇄하는 전술을 사용했으나 마리우폴을 비롯한 중소도시는 일일이 점령하고 중심지에 러시아 국기를 게양했다. 마리우폴 완전 점령에는 3개월이 소요되었다. 이처럼 시가지 점령은 병력과 화력, 무엇보다 시간을 요구하는 작전이다. 러시아의 주장에 따르면, 돈바스 지역의 ‘아조우부대’는 병원, 학교 등 민간시설에 진지와 작전기지를 설치하여 민간인 피해를 회피하는 러시아군의 작전을 역이용했다. 러시아는 이를 인간방패 전술로 비난했다. 요컨대 대부분의 작전 형태는 그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시가지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

3) 작전 수단 및 방법

첫째, 작전 간 주요 수단으로 정보전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각종 매체와 SNS를 통한 선전과 심리전을 이용하여 상대측의 사기 저하, 반전 여론 형성, 정신전력 약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전은 2014년 러시아의 정보전에 의해 크림반도를 상실한 서방측이 특히 관심을 경주하여 준비한 결과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러시아가 열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로 미국 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페이스북, 유튜브에서는 러시아군의 선전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반면,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활동이 우세한 양상을 보인다. 인터넷에서도 러시아 국방부에 대한 접속은 차단되어 있지만, 서방 국가의 자료는 쉽게 전파가 되어 우크라이나를 동정하고 지원하는 여론이 우세한 실정이다. 2월 24일 작전 개시와 함께 국제 해커조직 어나니머스(Anonymous)는 러시아에 사이버 전쟁을 선포하고 러시아 정부의 웹사이트와 관영 언론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다. 우크라이나는 스페이스X 민간위성 등 서방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군의 동향을 파악했다. 한국에서도 SNS나 유튜브 등 일인 방송에서는 절대적으로 러시아를 비판하는 성향이 강하다. 문제는 작전의 현상(Facts)을 논의할 때 가짜뉴스나 선전을 사실로 인정함으로써 현실을 왜곡하여 잘못된 정책을 유도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화력전이다. 러시아의 군사전략가 슬립첸코(Сличенко)가 언급했듯이 현대전은 ‘전쟁의 신’이라 일컬어지는 포병 이용이 중요하다. 러시아의 기본 공격 전술은 우선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군사시설에 대해 미사일, 포병, 항공기, 정밀무기 등을 이용

하여 폭격함으로써 기능을 무력화시킨 다음 기동부대를 이용하여 적 병력 격멸 및 영토를 확보하는 것이다(Сличенко, 2002). 주요 타격목표는 지휘소, 무기고, 보급시설, 병력 집결지 및 훈련장, 수송로 상 교량 및 교차로 등 핵심표적이다. 러시아 국방부의 일일 전황 보고를 보면 대부분 화력 공격의 결과 및 우크라이나군의 피해에 관한 내용이다. 5월 말 현재 화력전의 주요 대상은 서방의 지원물자이며,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서방의 무기 및 물자의 절반 이상은 전방부대에 도달하기 전에 파괴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유류 저장고 및 정유공장 등 전쟁물자 파괴를 위해 순항미사일 등 정밀무기를 사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과 비슷한 무기체계를 보유했으나, 대부분 파괴되어 최근에는 미국 및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무기로 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소련식 무기체계와 NATO 무기체계가 혼합되어 과도하게 다양한 무기를 운용함으로써 무기 사용 방법을 훈련한 다음에 투입해야 하는 문제점에 봉착하기도 했다. 즉, 별도의 훈련 소요가 발생하여 무기 지원 효과 발생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무기와 장비 고장 발생 시 정비가 곤란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심리전이다. 러시아는 전자전과 심리전을 결합하여 적의 작전을 오도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전술을 교리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전쟁에서 그러한 작전을 활용한 사례는 노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점령지역의 민심을 자국에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한 민사작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민사작전은 점령지역 주민의 안전 도모 및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도적 피난통로 제공 및 난민 보호, 생필품 보급 등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루한스크, 도네츠크 등 돈바스 지역을 포함하여 러시아군이 진출한 하르키우, 헤르손, 자포로지에 주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러시아는 민군관 통합 본부를 설치하여 운용하면서 전쟁 이후 8월 말까지 약 350만 명의 난민을 러시아 본토로 후송하여 9,500개소에서 난민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 난민에 대해서는 기초생활 및 의료지원, 자녀 취학, 일자리 보장 등 조치를 하고 있다. 점령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생필품 제공 등 민심 회유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지뢰 제거 활동을 통해 1.9만 헥타르 지역에서 폭발물 58만 여개를 제거했다. 남부 헤르손 주의 경우, 지역 내 유지들과 협력하여 군정을 시행하면서 러시아 화폐 사용, 러시아 통신시스템 전환, 상점 개설 등으로 주민 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하여 약 770만 명이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헝가리 등 주변국으로 피난을 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특히, 난민들이 러시아로 가거나 러시아

군 점령지역에 있는 자국민이 러시아화를 우려하고 있다. 부총리인 이리나 베레슈크는 트위터에서 “러시아 여권을 받지 말고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가라”고 권고하고 있다(www.rg.ru, 2022.5.30.).

러시아는 4월 초에 부차시 민간인 학살 관련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은 이후 포로 대우 등 인권 관련 활동에도 주의하고 있는 것 같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러시아군에 투항한 아조우연대의 지휘관이 포로들에 대한 음식 제공과 의료 제공, 폭력에 노출된 적이 없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연합뉴스, 2022.5.25.). 러시아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군의 활약상과 성공적인 작전 활동을 나타내는 동영상 공개하여 작전에 대한 신뢰성과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매일 국방부가 실시하는 일일 전황 보고 시에도 군사작전 동영상을 병행해서 보여주고 있다.

넷째, 보급전이다. 보급은 전쟁지속능력의 핵심이다. 작전 초기 키이우 방향으로 진입한 러시아군이 식량, 연료, 탄약 등 군수물자가 부족하여 3월 중순이면 공세종말점에 도달한다는 유럽 군사전문가의 진단이 나오기도 했다(조선일보, 2022.3.23.). 그러나 러시아는 8월 현재도 작전을 지속하고 있기에 그 진단은 오류임이 판명되었다. 어쨌든 보급 문제는 전쟁지속능력을 가름하는 중요 문제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병참선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에서 작전부대를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보급 문제는 우크라이나에서 더욱 심각하다. 우선 원래 보유했던 무기와 장비가 거의 모두 파괴되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세계 각국에 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최근 작전에서는 지원받은 무기마저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상당량이 파괴된 데다가, 종류가 다양하여 별도의 훈련이 소요되는 문제점도 앞서 지적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유류난이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이전에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원유를 수입했으나 이제는 미국의 지원으로 폴란드 국경을 거쳐 유류를 지원받고 있으나 유조선 차량 이동 시 노출이 쉽고 국내 6개 정유공장과 유류 저장고가 모두 파괴되어 극심한 유류난을 겪고 있다. 따라서 기동장비를 지원받아도 유류가 부족하여 가동이 곤란한 상태에 있다. 그밖에 보급 및 정비시설과 수송로 파괴, 방위산업시설 파괴 등도 전쟁지속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다섯째, 포위소멸전이다. 돈바스에서 러시아의 작전 형태를 보면 모두 포위소멸 형태를 보인다. 우선 8월 현재 작전상황도를 보면,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에서 고리모양 또는 호구(虎口) 모양의 대규모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포위망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소멸할 수 있는 이상적인 모양이다. 러시아군의 의도에 따라 계속해서 포위망 속으로 우크라이나군을 유도하여 격멸할 수도 있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포위망을 닫으면서 작전을 종결할 수도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다. 큰 포위망 속에는 작은 포위망이 여러 개 형성되어 있다. 러시아는 큰 포위망을 유지하는 가운데 작은 포위망에서 5,000~6,000명 규모의 우크라이나군의 유생역량을 말살하면서 점령지역을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다.



<그림 2-2> 러시아군 공격 상황'

4. 결론 및 함의

미국이 주도하는 단극적 국제질서는 세계화 과정과 함께 중국의 부상과 각 대륙에서 지역 강국들이 부상하면서 다극화 체제로 변하기 시작했다. 비록 미국이나 중국보다 국력이나 국제적 영향력에서는 다소 뒤지긴 하지만 러시아도 군사강국과 에너지 강국으로서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해왔다. 특히 푸틴 집권 이후 약 20년간 강한 러시아를 목표로 내적으로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증강하고, 외적으로는 중국 및 인도와 협력하면서 종합적인 국력 신장과 함께 세계적 강대국으로서의 자신감과 함께 국제문제, 특히 안보 문제에서 주장이 강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2020년부터 확산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미국이나 유럽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줄이고, 경제침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각자도생으로 특징되는 대외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 이익을 기준으로 위협을 선정하고 그러한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함은 물론 자국에 유리한 레드라인(Red Line)을 설정하고 이를 주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러시아의 경우, 1990년대에는 나토 확대에 대해 대부분 인내하며 이를 수용하였으나 군사력이 강화된 현시점에서는 자신의 레드라인을 강요하며 그 선을 넘으면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선언해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강해진 러시아가 자국의 안보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발했다. 유럽에서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시아의 타이완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적색 원 표시가 포위망임(www.kp.ru, 2022.5.24.).

대러 경제제재와 원유와 가스 수입 중단 조치 등으로 세계적 공급망 급변과 에너지 가격과 농산물 가격 인상 등 기존의 경제질서가 혼란해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한국의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 몇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주변국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한다. 전문가를 육성하여 기본적인 연구 자료를 축적하고 유사시 대상국의 의도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주변 군사 강국들 사이에 발생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전쟁 양상을 사전에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대만 침공, 러시아와 일본의 쿠릴열도 영토분쟁,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러와 미·일의 대립,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등 다양한 상황 변화에 따라 한국이 의도치 않게 제3국의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협들에 관한 연구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사전에 발전시켜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주변국들과 우발적인 무력 충돌 및 상호 국경 침범 방지, 공동의 안전보장을 위해 다자안보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지역은 유럽지역과 달리 적절한 군비통제 기제가 없는 상황이므로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상하이협력기구(SCO),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안보회의(ASC) 등에서 해상 및 공중 위험행동방지조약(가칭)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관계 당사국과 양자 협정을 발전시킴으로써 다중적 안보기제 확립이 가능하다고 본다.

셋째, 유사시 국토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 확보이다. 내적으로는 자국 지형에 적절한 무기체계와 방어전략으로 침공한 적을 퇴치할 수 있는 자위력을 구비하고, 외적으로는 동맹을 포함하여 전시에 군사적, 경제적 협력·지원 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표출된 다양한 전쟁 특징을 고려하여 한국 지형에서 발생 가능한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탄약, 유류, 식량 등 전쟁물자를 확보한 가운데 시가전, 정보전, 화력전, 보급전을 원활히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전술 전략 발전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Слипченко. Войны шестого поколения. Москва: Ракурс, 2002.

김규철(202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인식과 의도. 군사논단, 109, 15-38.

이철민(2022). “러시아, 공세 종말점 도달”... 우크라가 이기고 있다는 근거. 조선일보,

조성흠(2022). ‘우크라이군 포로 아내’, “러, 음식·물 제공…폭력 없다 들었다”. 연합뉴스.

브레진스키(2000). 거대한 체스판(김명섭 옮김). 도서출판 삼인: 서울

Mary Elise Sarotte(2014). “A Broken Promise?” Foreign Affairs

Герасимов Валерий. 2013.02.26. “Ценность науки в предвидении.”
<https://www.vpk-news.ru/articles/14632>.

영국 국방부, <https://www.facebook.com/theministryofdefence>.

우크라이나 국방부, <https://www.facebook.com/MinistryofDefence.UA>

러시아 국방부, <https://www.facebook.com/mod.mil.rus>.

러시아 대통령 홈페이지(크렘린), <http://www.kremlin.ru>.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

www.telegra.ph.

www.kp.ru

Слипченко. Войны шестого поколения. Москва: Ракурс, 2002.

“Киев начал борьбу за миграционные потоки в Украине.”
https://www.ng.ru/cis/2022-05-30/5_8448_ukraine.html (검색일: 2022.5.30.).

Abstract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Ukrainian War

Kyu-Chul Kim

It has been five months since Russia invaded Ukraine. The operation exhibits various characteristics. This article is to study such key characteristics to draw security implications.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grasp the situation of the war due to the influence of public opinion wars. Failure to properly evaluate the situation leads to information failure and policy failur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have an objective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Looking at the map of the operational situation so far, Russia seems to have the upper hand and is gradually expanding the occupied territory.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war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n terms of operational nature, it shows the appearance of all-out war, territorial battle, and street battle. In terms of operational means and methods, the war shows information warfare, fire combat, psychological warfare, supply warfare, and siege and destruction warfare.

In conclusion, Russia asserts its own security based on military power, and the war in Ukraine also affects Asia. For South Korea's military and economic security, the following should be considered. First, information collection and analysis systems about neighboring countries should be developed.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ultilateral security system. Third, it is necessary to secure self-defense capability and alliances to defend the land in case of emergency. Fourth,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future war by considering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war in Ukraine.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가와 전망, 그리고 한국

박상남*

1. 들어가며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번 전쟁으로 세계인들은 21세기에, 그것도 유럽에서 침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다. 또한 생생히 전달되는 전쟁의 참상을 보며 우리는 인간의 생명과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과 이후 국제정세는 많이 달라질 것이며 한반도 정세 또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전쟁의 결과에 따라 국제질서가 힘을 앞세운 야만의 시대로 퇴보할 수도 있다는 점이 걱정이다. 만약 러시아의 승리로 끝난다면 국제사회에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해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것이다. 특히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간섭과 압력이 확산될 수 있다. 이를 예방하려면 이번 전쟁의 본질을 균형적으로 바라보고 대응해야 한다.

전쟁의 성격에 대해 그동안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지만,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국익이나 강대국들의 세력균형 논리가 주류를 형성했다. 그러나 전쟁을 세력균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하게 되면 인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존엄성과 평화의 실현이라는 가치 기준에서 전쟁을 바라볼 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전쟁은 강대국이 약소국의 주권과 대외정책의 자율성을 강제하려는 폭력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나토의 확장에 대한 러시아의 지정학적 반격으로 보는 현실주의적 해석은 강대국 중심주의로 균형적 평가로 보기 힘들다. 자칫 이런 논리가 러시아

* 現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러시아 Moscow State University 정치학 박사

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불가피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다. 강대국의 영역 다툼이나 세력균형 논리는 이번 전쟁의 또 다른 성격인 약소국의 주권과 자율성 침해를 합리화하는 논리로 오용될 수 있다.

강대국의 편익에 따라 약소국을 어느 편에 서도록 폭력으로 강요한다면 이는 국제사회가 힘들게 구축해온 민족자결주의, 주권 존중, 수평적 국제관계를 원점으로 되돌려 억압적 국제질서로 회귀할 수 있다. 특히 한반도에서도 강대국의 부당한 간섭과 횡포가 세력균형의 논리로 정당화되는 끔찍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국제규범과 인류보편적 가치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국제관계의 발전은 폭력을 거부하고 인간의 존엄성, 평화, 민주주의, 상호존중의 수평적 국가관계를 향한 부단한 노력과 희생의 결과물이었다. 그래서 국제관계 역사는 자구책인 힘과 세력균형 추구뿐만이 아니라 부당한 폭력에 맞서는 가치의 투쟁과정이기도 했다. 국익 실현을 위한 경쟁과 동시에 평화, 인류공동발전을 향한 부단한 노력이 역사발전을 이끌어 낸 원동력이었다. 때문에 국제관계를 힘의 논리에서만 설명하는 것은 매우 편향된 시각이 될 수 있다.

2. 전쟁에 대한 균형적 평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토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대결로 설명되고 있다. 나토의 확장이 유럽의 세력균형을 흔들면서 푸틴으로 하여금 전쟁에 나서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동유럽은 물론 우크라이나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나토의 동진에 대해 푸틴이 거듭 경고를 했지만 미국과 서방은 이를 무시하면서 전쟁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시각이다. 일부 미국 전문가도 일방적인 나토확장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John J. Mearsheimer, 2021). 안보적 우려를 제기했던 러시아를 배려하지 않은 미국의 오만한 대외정책에 대한 비판도 주요 흐름 중에 하나이다. 이런 시각에서 전쟁초기 미국이 전쟁을 유도했다는 음모론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미국에 대한 비판은 냉전붕괴 초기에 러시아를 포용해서 지속성 있는 국제관계의 틀로 만드는데 실패했다는 점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외교적으로 예방하는데도 무능했다는 점으로도 연결되고 있다. 특히 나토가 러시아 주변에 무기배치를 늘리고 연합 훈련을 하는 등 푸틴을 자극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프란치스코 교황 발언, 2022. 6. 14). 우크라이나 정부의 미숙한 대응도 푸틴에게 전쟁에 나설 명분을 주었다는 점에서 전쟁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1990년대 초 고르바초프와 옐친은 러시아가 나토나 EU의 구성원이 되길 원했으며 친 서방정책을 전개했다. 이는 미국이 러시아를 서방세계의 일원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를 포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고립시키면서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미국은 여전히 러시아를 가상의 적으로 한 나토확장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미국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기대는 반감으로 바뀌어갔고, 친 서방정책 보다는 강대국의 자존심 회복을 주장하는 푸틴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나토확장정책은 강경한 대외정책을 주장하는 푸틴정권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켜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만약 미국이 민주적 개혁과 경제회생을 통해 러시아를 서방의 일원으로 만들고자 했던 옐친정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포용했었다면 국제관계의 틀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다. 급기야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이 약화되기 시작하자 푸틴은 그루지야를 침공하면서 본격적인 도전장을 내밀기 시작했다.

전쟁발발 이후 미국과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대러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전쟁의 참상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나토가입을 서두르며 푸틴을 자극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미숙한 대응도 전쟁의 원인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의 가장 큰 책임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과 러시아에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자율성과 주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정학적 목표만을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다. 보다 자유롭고 민주적인국가에서 살기를 원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은 EU와 나토가입을 원했다. 이는 그 어떤 외부세력도 간섭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유한 주권에 관한 사항이다. 그래서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지정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이해하거나 묵인한다면 향후 국제관계는 강대국의 폭력적 강압이 일상화되는 야만의 시대로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정치는 힘의 논리가 우선하는 냉엄한 세계로 보는 현실주의는 때론 전쟁을 국가의 생존 수단으로 설명하곤 한다. 그러나 어떤 성격의 전쟁이냐에 따라 평가는 다를 수 있다. 또한 현실주의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을 강조하는 자유주의를 이상적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인류역사발전은 세계평화와 공존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들이 모인 결과이기도 하다. 우려되는 점은 현실주의적 시각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오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전쟁이 나토의 확장에 대해 러시아가 세력균형차원의 대응한 것이며 이미 미국의 전문가들도 이를 예측했다는 논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평화와 국제규범 보다는 미국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대결과 세력균형 차원에 경도된 시각이다. 또한 철저한 강

대국 중심의 시각은 러시아에 예속되지 않고 독립국가로서 주권과 안보를 지키려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소외시키고 있다.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서 우크라이나는 다툼의 대상일 뿐 독립적인 행위자로서 설명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큰 문제이다. 우리는 힘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세계 보다는 모두가 존중받는 문명화된 국제사회에서 후손들이 살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서도 약소국의 입장, 국제관계를 수평적으로 바라보는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3. 누가 더 호전적인가?

러시아는 이미 2008년 조지아를 침공하면서 구 소련권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힘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2014년 크림반도 병합,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의 야심은 점점 노골화되어가고 있다. 푸틴의 과감한 군사행동에 러시아 국내지지도는 상승한 반면, 미국은 속수무책인 상황이 반복되었다. 푸틴이 전쟁을 해도 손해 볼 것이 없으며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얻는 것이 많다는 오판을 하게 된 배경이다. 푸틴은 군사행동을 통해 자신의 강력한 국가 수호자 이미지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강대국 러시아의 힘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힐러리 클린턴도 푸틴을 자신을 구세주로 생각하는 자기도취증 환자로 평가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정, 지경학적 요인도 크지만 국내적으로는 국내정권안보용 이벤트적 성격도 있다(박상남, 2022).

푸틴이 강조하는 나토의 위협도 엄밀히 생각해 보면 과장된 측면이 있다. 사실 나토는 공격이 아닌 방어에 중점을 둔 기구이며 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덩치가 월등히 큰 러시아를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인식한다. 특히 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구 동유럽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안보 불안감은 매우 크다. 때문에 동유럽 국가들의 나토 가입은 자국의 안보를 위한 당연하면서도 유일한 선택일 수 있다. 유럽의 소국들이 러시아에 위협을 가하기 위해 나토가입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푸틴은 미국과 유럽을 분열시키고 러시아의 영향력을 유럽에 확장하려는 정책을 전개해 왔다. 또한 푸틴은 선거를 민주주의 국가의 약점으로 보며, 미국이나 유럽에서 친 러시아 정권이 들어서도록 사이버, 여론 조작 등을 한다는 의구심을 받아왔다. 지난 미국대선 개입 논란이 대표적이며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 나토는 군비증강 보다는 방위비를 서로 떠넘기며 분열양상을 보여 왔다. 뿐만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는 러시아에 우호적이며

협력을 강화해왔다. 따라서 나토가 러시아를 위협한다기보다는 그 반대로 보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다.

세계 1위의 핵 강국 러시아를 나토가 공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토의 강령이나 이제까지의 행위를 보면 러시아는 공격의 대상이 아닌 방어해야할 위협이다.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쟁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 시리아 내전 개입 등에서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 이유 중에 하나는 핵 강대국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려했기 때문이다. 이를 너무도 잘 아는 푸틴은 자신감 있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었다.

특히 유럽은 많은 에너지와 식량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와 갈등보다는 협력이 유럽에게 이익이다. 유럽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푸틴은 이번에도 에너지자원을 통해 유럽을 통제,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 영국의 영향력이 약화된 유럽에 영향력을 확장하기를 원하고 있다. 러시아의 지정학적 전략은 1차로 구 소련권역에서 확고한 영향력을 회복한 후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밀어내고 유럽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이하 EAEU) 창설, 상하이 협력 기구(이하 SCO)강화 등이 구 소련권에서 영향력 강화노력이라면, 유럽진출 전략은 바로 분열정책이다. 푸틴은 EAEU를 구소련권은 물론 유럽까지 포괄하는 경제공동체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푸틴, 2011). 이는 푸틴의 목표가 구 소련권을 넘어 유럽으로 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도 러시아와 유럽을 아우르는 열린 유라시아 건설이 목표라고 말하고 있다(메드베데프, 2022).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원인이 푸틴이 말하는 나토의 위협보다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목표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조지아, 우크라이나 침공과 시리아 내전개입은 푸틴이 지정학적 목표달성을 위해 얼마든지 전쟁을 수단으로 사용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강대국 러시아의 지도자로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기를 원하는 푸틴의 개인적 야심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푸틴의 야심을 파악하려면 먼저 러시아 관변사상가 알렉산더 두긴의 ‘신유라시아주의’(А. Дугин, 1999)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푸틴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그는 국제사회를 러시아가 중심이 되는 선한세력과 미국·서방이 중심이 된 악한세력의 대결로 바라본다. 즉 선한 러시아제국이 악한 서구를 물리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두긴의 세계관은 푸틴의 대외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다분히 자기중심적인 세계관

과 목표를 위해 국민의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전쟁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푸틴에게 합리적 국가운영자로서의 면모를 발견하기 어렵다.

4. 약소국의 입장에서 보는 유럽의 지정학

사실 유럽 약소국들의 입장에서 나토가입은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다. 이는 한미동맹이 주변국 침략용이 아니라 방어의용인 것과 같은 이치이다. 동유럽 국가들의 가장 큰 악몽은 다시 러시아의 위성국가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번 러시아의 침공은 역설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왜 그토록 절실했는지를 증명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은 강대국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와 EU가입을 통해 보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를 꿈꾼다. 반면 푸틴은 강대국 러시아를 위해 중요한 발판이 되는 우크라이나를 필요로 한다. 지정학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경제, 인구학적으로도 중요한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푸틴의 생각이다.

역사학자 사로티 교수는 나토가입은 동유럽 국가들에게 필요한 선택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이들 국가들이 나토의 일원이 된 후에 민주주의를 공고히 할 수 있었고 역내 평화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말한다. 즉 유럽 약소국들의 입장에서 나토의 확장은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이지 러시아가 주장하듯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다(메리 엘리스 사로티 인터뷰, 2022). 따라서 우크라이나 입장을 외면하고 나토와 러시아라는 양 진영의 세력균형차원에서 이번 전쟁을 보는 것은 다분히 편향적이다. 이번 전쟁을 계기로 약소국의 주권을 소외시키는 강대국 중심의 사고가 우리 한국사회에도 팽배에 있다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한국의 입장에서 대외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편향된 사고는 개선이 필요하다.

5. 향후 전쟁 전망과 한반도에 주는 영향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거론되고 있다. 전쟁의 전개양상에 따라 국제사회는 물론 한반도에 주는 영향도 달라질 것이다. 먼저 이 글에서는 전쟁전망을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설명해 보고자 한다.

1) 첫 번째 시나리오-러시아의 부분적 승리

러시아가 부분적 승리를 거두고 미국, 서방이 분열되는 경우로 국제사회는 각자도생과 군비경쟁에 들어설 것이다. 결국이 강화된 중·러 권위주의 진영과 미국·서방진영

이 대립구도가 본격화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강대국의 간섭이 노골화 되면서 약소국의 입지는 약화될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도 미·중 대립이 격화되고 북·중·러 VS 한·미·일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중·러의 지원을 받은 북한은 보다 과감하게 핵무기 고도화를 진행하면서 대남 압박에 나서고 중·러는 공개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면서 한국의 대외정책에 간섭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러시아의 부분적 승리란 동부돈바스 지역을 러시아가 장악하는 경우이다. 또한 자신감을 찾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내륙으로 진격하며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푸틴은 전쟁 승리를 선언하며 국내 집권기반을 강화하고 중앙아시아 등 구 소련권 국가들과 동유럽에 대한 통제와 압력을 더욱 노골화 할 수 있다. 나토와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러시아 경계심도 강화될 것이다.

서방의 대러 제재전선이 분열, 약화될 경우 나토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나토의 능력과 역할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특히 세계경찰국가를 자임했던 미국의 위상은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동아시아에서도 북·중·러 밀착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위상이 상승할 것이고 북한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대러 제재와 대중 포위 전략에 혼란을 주는 유용한 복병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중·러 양국에게 군사, 경제지원을 요구하며 핵보유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수순에 들어갈 것이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국제사회는 군비·핵무기보유 경쟁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과 일본 내에도 핵무장 여론이 비등해질 수 있다.

2) 두 번째 시나리오- 우크라이나의 효과적 버티기와 러시아의 약화

우크라이나가 효과적으로 버티고 전쟁이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러시아가 약화되는 경우이다. 푸틴의 국내정치기반이 흔들리거나 온건한 차기정권이 들어선다면 서방과의 관계회복도 급진전될 것이다. 이 경우 중·러 권위주의가 균열되고 미국과 서방의 주도권이 강화될 것이다. 힘보다는 국제규범에 의한 문제해결이 강조되고 약소국의 입지도 상대적으로 상승될 전망이다. 미국의 대 중국 포위전선은 탄력을 받을 것이며 공급 망 재편이 가속화 될 것이다. 여기서 중국의 태도 변화에 따라 미국의 대응도 달라지는 변수는 존재한다.

동아시아에서도 미국의 지위가 다시 상승하고 미·중 대립도 소강상태가 되면서 북한도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동아시아에서 극한 대립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우세해질 것이다.

6. 한국의 대응

한국은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한다. 한국의 대응은 첫 번째,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확고한 힘을 첨단무기와 군의 전투역량 혁신을 통해 갖추어야 한다. 북핵에 대응할 무기체계는 물론 강대국의 간섭에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독자적인 힘을 보유해야 한다. 수평적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군의 전략자산사용에 대한 결정권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상호존중에 기반 한 평화적 문제 해결이 국제사회의 주요 흐름이 되도록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한국이 국제규범에 의한 상호존중과 공존의 국제평화연대 구축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보다 문명화된 인류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숭고한 가치를 향한 끊임없는 의제발굴과 실천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 장기간 지속될 미·중 경쟁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다. 최근 힐러리 클린턴 전미국무장관은 러시아는 단기적인 위협이지만 중국은 장기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했다(클린턴 인터뷰, 2022. 6.11). 이는 중·러 양국을 바라보는 미국주류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의 대 중 포위망은 지속될 것이다. 미국의 대 중국압박이 4자 안보협의체 쿼드(Quad), 오커스(AUKUS),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등으로 모양을 갖춰 가면서 중국의 반발과 대응도 격해질 것이다. 특히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중국을 배제한 칩4와 국제공급망 재편이 본격 추진될 경우 한국은 기회와 위협에 동시에 대응해야 한다.

네 번째, 한국은 국가적 지원을 통해 첨단기술경쟁에서 우위에 서야 스스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경제적, 기술적 역량이 21세기 중요한 국력으로 평가받는 지금 국가적 비전과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중국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을 중심으로 자국중심의 질서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미사일 고도화를 지속하고 중·러와 밀착하면서 유엔의 대북제재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태도도 동아시아의 정세에 중요한 변수다.

북한과의 대화는 선택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의무이기에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정권에 따라 일관성이 훼손되거나 국내정치를 의식한 강경한 태도는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해서도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되, 그동안 구축된 협력 기조를 더욱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국제사회의 중요한 행위자요, 한반도 평화에 필요한 주요 협력대상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특히 중단된 한·러 협력을 복원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킬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면서도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지 않는 포용적 외교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박상남(2022). 푸틴의 숨겨진 목표. 국회세미나 발표문. 42-51. (2022. 4.11.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John J. Mearsheimer(2021). 미국외교의 거대한 환상. 『서울: 김앤길 북스』. p. 364.

A. Дугин. 1999. Основы геополитики: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е будущее России, АРКТОГЕЯ-центр, pp.100-168.

메리 엘리스 사로티(2022). 푸틴이 말하는 약속은 애초에 없었다. 『피렌체의 식탁』

(<https://firenzedt.com/22029>)

메드베데프(2022). 러 前대통령 “우크라, 나치와 같은 운명 맞는 게 당연.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406000049>)

프란치스코 교황(2022). 교황 "우크라 침공 몇 달 전 전쟁 발발 우려 전해 들어".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4163700109?input=1179m>)

푸틴(2011). 경제연합으로 '유라시아제국' 부활 꿈꾸는 푸틴 『조선비즈』

(<https://news.v.daum.net/v/20110818060718582>)

힐러리 클린턴(2022). 힐러리, 러시아는 단기적 위협..장기적 위협은 중국. 『연합뉴스』

Abstract

Ukraine War evaluation and Prospects, and Korea

Park, Sang Nam

Some experts explain the war in Ukraine as inevitable in terms of Russia's national interest and balance of power. However, the nature of this war is an act of violence in which a powerful country suppresses the sovereignty and autonomy of foreign policy of a weak country. The driving force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civilization was the ceaseless effort and sacrifice for human dignity, peace, democracy and mutual respect. It is also the struggle of values against unjust violence that has made it what it is today. For this reason, war must be evaluated in a balanced way from a realist and liberal perspective.

If the war ends with Russia's victory, the use of military force in the name of national interest and interference with weaker countries will become frequent. However, if Ukraine fights effectively and Russia weakens, international norms, peaceful problem-solving, and the autonomy of weaker countries will be relatively important. To this end, Korea should actively engage i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peace alliance for the realization of universal valu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balance the firm power and values to defend itself in the US-China confrontation. Korea must continue to develop its international capabilities by leading the way in cutting-edge technology. This is because economic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are the national power and influence of the 21st century.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dialogue and trust-building with North Korea must continue under any circumstances. Because hardness cannot beat softness.

신냉전 경제 블록 시대, 한국 경제 안보 전략

주 원*

1. 들어가며

세계 경제가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대부분 지역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글로벌 경제가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희망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다시 활력을 확보하여 긴 불황 국면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중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 비우호적인 대외 경제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국가 간 협력보다 대립이 강조되고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극단적인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통상 환경마저 적박하게 만들면서, 이제는 ‘경제 안보’라는 핵심 아젠다가 모든 국가의 전략 목표로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내수시장이 협소하고 자원이 부족한 근본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러한 통상 환경의 변화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자유무역주의와 세계화라는 질서 속에서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 협소한 내수시장의 외연(外緣)을 확장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외화로 경제가 필요로 하는 원자재를 수입하여 한국 경제라는 엔진을 돌릴 수 있었다. 지금 대두되는 새로운 통상 질서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시장에서 기업들은 원부자재 가격 급등으로 생산비용 급증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부 핵심 원자재나 소재·부품의 경우 조달 자체가 어려워져 조업이 중단되기도 한다. 가게들도 살인적인 고물가에 직면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싸움에 대응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답답함을 경험했었다.

이러한 대외 환경 변화는 한국 경제에 불리한 방향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생존 방법을 모색해야만 하는 것을 강요받고 있다. 이에 최근

* 現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사대우)
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 질서의 5대 트렌드를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 경제에 어떠한 위협을 줄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았다. 나아가 그러한 리스크에 대응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제 안보 전략은 무엇인지를 모색해 보았다.

2. 글로벌 통상 질서의 5대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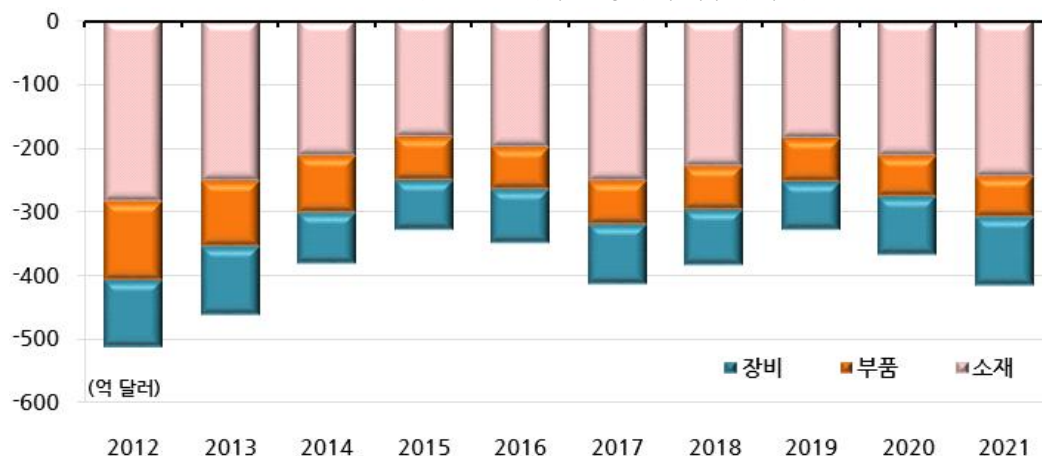
코로나 위기 이후 부상 중인 새로운 통상 질서로는 ① 외교적 보복 수단으로 사용되는 수출 규제, ② 새로운 국제질서, 기술 패권 경쟁, ③ 자원 안보 시대의 대두, ④ 중국발 공급망 교란, ⑤ 신냉전, 경제 블록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외교적 보복 수단으로 사용되는 수출 규제

두 국가 사이의 경제적 협력 관계가 높다는 점은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된다. 장점은 상호 취약 부분을 보완하여 양국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커진다는 윈윈(win-win)이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협력 관계는 전통적으로 바로 이러한 상호보완성에 의존한다. 물론 양국 간 일부 제품에서 수출경합도가 높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일본이 첨단 소재와 부품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하고, 한국은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상용화하는 구조가 한·일 관계의 주류였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대일본 무역적자는 연평균 약 400억 달러에 달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러한 적자가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 거의 대부분이 소재, 부품, 장비 등의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품목에서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품목들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다면 당연히 국산 소재·부품·

<그림 4-1> 대 일본 소재·부품·장비 무역수지 추이



자료: 소부장넷 통계를 이용한 저자 작성.

장비를 사용했을 것이다. 가장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과 공급망을 선택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한 협력 관계에 금이 간 계기가 바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이다. 한·일 간 역사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일본은 지난 2019년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되는 주요 중간재 즉, 고순도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불화폴리이미드(Fluorinated polyimide)의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나아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white list, 백색국가)*에서 배제함으로써 약 1,100여 개의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를 이어갔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기존의 통상 질서와 차별점이 있다. 우선 규제의 대상이 되는 교역의 방향이 다르다. 전통적인 통상 무역 규제가 자국에 들어오는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인 반면, 수출 규제는 밖으로 나가는 자국 제품에 대한 통제이다. 수입 규제는 특정 품목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로 아주 흔한 편이다. 대표적 사례가 미국의 ‘슈퍼 301조’로 대변되는 수입 쿼터제나 보복 관세 부과 등이다. 반면 수출 규제는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동이 되기 때문에 매우 드문 편이다. 두 번째의 차별점은 그 목적에 있어서 수입 규제는 자국 산업 보호에 있지만 수출 규제는 상대국 산업에 대한 공격에 있다. 수입 규제는 경쟁력이 높은 해외 제품이 자국 시장에 들어올 경우 경쟁력이 낮은 자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이를 제한함으로써 자국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를 보호무역 주의라고 불렀다. 그런데 수출 규제는 상대국 산업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상대국에 피해를 주는 것이 목적이다. 당연히 동시에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자국 기업들도 타격을 받는다. 자신의 희생을 감내하면서 상대국을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통상 규제이다. 세 번째 차별점은 수입 규제는 경제적 이익 확보가 목적이지만, 수출 규제는 정치·외교적 주도권 확보가 목적이다. 수출 규제는 자국 산업의 희생을 동반하기 때문에,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극단적이고 공멸적인 수단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에 나선 것은 역사, 영토 등의 이슈에서 대립 중인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을 통해 외교적 우위를 확보하고, 일본 사회 내에서 정치적 지지율을 올리려는 목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수출 규제의 또 다른 예가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이다. 2022년 3월 미국 상무부는 러시아의 국방 산업이나 첨단 산업에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 컴퓨터 등

* 일본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품목을 수출할 때 행정 절차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 목록이다.

ICT 제품에 대해 FDP(Foreign Direct Product Rule,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을 적용하였다. FDP는 특히 미국 외 기업도 미국의 기술을 사용하여 해당되는 제품을 만들었다면 똑같이 수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 수단이 된다. FDP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인 화웨이(Huawei)를 제재하기 위해 사용했었던 방법이다. 당시에는 중국의 기술 추격을 차단하고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면, 이번 러시아에 대한 FDP 적용은 오로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면서 동유럽 지역으로 군사적 확장을 도모하는 러시아에 대한 군사·외교적 견제의 성격이 강하다.

2) 새로운 국제질서, 기술 패권 경쟁

생산활동의 핵심 요소는 노동, 자본, 기술이다. 이 중에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신흥국이 선진국에 대해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경제발전 단계가 차이가 있고 국민 소득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이제는 자본도 국적이 없다. 지금 기업들은 인건비, 조세 등 생산 비용을 낮출 수만 있다면, 자본 투자를 통해 어느 나라로든 갈 수 있다. 나아가 신흥국의 자본 투입 능력도 거대화되면서, ‘선진국의 자본과 신흥국의 노동력’이라는 공식도 붕괴된 지 오래다. 시장 지향적 투자도 BRICs와 같은 거대 시장 규모를 가진 신흥국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선진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들이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생산요소는 기술 밖에는 없다. 따라서 노동과 자본의 물적 생산 요소의 경쟁력 열위에 직면하면서 선진국이 기술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것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동안 유효했다. 기술이라는 생산요소는 대규모의 투자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R&D 생태계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확보할 수 없다. 특히, R&D 투자가 기술이라는 무형의 자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흥국이 단기간 내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잡을 수 없다.

그런데 후발국들이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 여겼던 그 기술이라는 생산요소에 경쟁력을 빠르게 높여가는 국가가 나타났다. 바로 중국이다. 최근 미국의 대중국 기술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한 대규모의 관세 부과 조치는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 손해, 즉 막대한 대중국 무역적자에서 시작되었다. 무역적자는 미국 기업의 활력을 약화시키고 일자리를 줄이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이 미

국산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하게 만들어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단순한 발상에서 시작되었다. 일부에서는 이때부터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의 분위기나 관련된 미국 내 보고서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술 패권 경쟁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예상과 달리 중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보복으로 이어졌고 양국 간 교역 규모의 차이로 중국이 굶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금까지도 관세 전쟁은 이어지고 있다.

기술 패권이라는 이슈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그 시작은 중국 기업들의 미국 지식재산권의 무단 도용을 차단한다는 도덕적 명분에서부터이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국가 단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중국 IT 기업에 대한 개별적 제재로 진행 중이다.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생산 제품에 대한 사용 금지와 화웨이에 대한 부품 수출 금지, 반도체 기업인 SMIC에 대한 반도체 칩 수출에 대한 거래 제한, 위챗(WeChat)과 틱톡(TikTok)에 대한 사용 제한 등이 그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테크 기업들을 규제하는 것은 디지털 전환이 글로벌 산업의 중심이 되는 지금, 중국의 기술 추격을 따돌리고 미래 미국의 경제적 헤게모니를 확고히 잡고 가기 위한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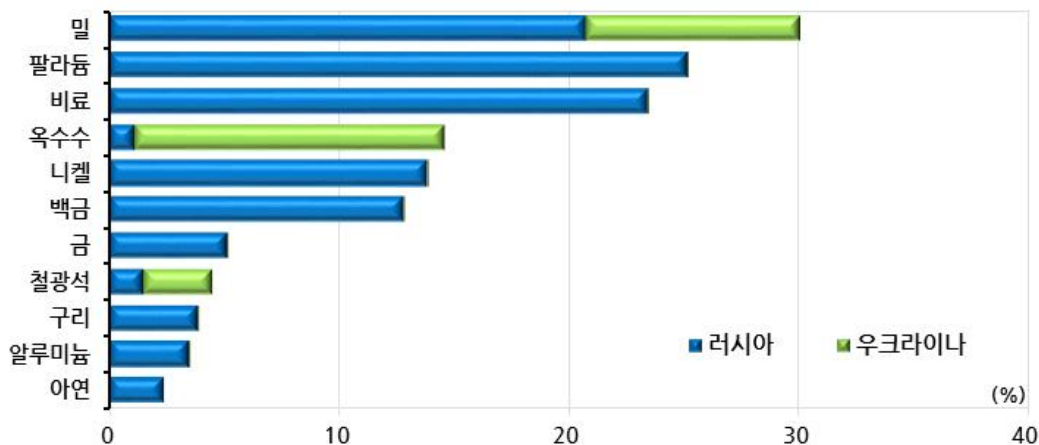
3) 자원 안보 시대의 대두

자원 안보라는 개념의 본격적인 시작은 7, 80년대의 오일 쇼크에서일 것이다. 당시 중동 산유국들의 석유 무기화는 세계 경제에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그 이후에도 중동 지역에 국지전이 벌어질 때마다 국제 유가는 급등하곤 했다. 또한, 2010년 센카쿠(尖閣)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외교적 대립으로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 것도 대표적 사례이다. 통상 자원수출국은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기 때문에 자원 안보는 선진국 중심의 국제사회 질서에 비(非)선진국들이 대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최근 이러한 자원 안보가 다시 세계 경제의 핵심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그 분위기를 만든 것은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다. 2020년 코로나 위기에 따른 세계 경제의 침체로 국제유가가 급락했었다. 2020년 4월에는 WTI(Western Texas Intermediate, 서부텍사스 중질유) 선물 가격이 이론상에서나 가능했던 마이너스까지 나왔던 적도 있을 정도로, 시장에서는 향후 세계 원유 수요가 극단적으로 침체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했다. 이에 따라 원유 생산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상황은 2021년에 극적으로 전환되었다. 여전히 방역 상황은 어렵지만, 코로나19 백신이

출시되면서 시장의 미래가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에 따라 석유 시장의 공급 부족 상황은 2021년에 들어 크게 해소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초저금리 정책 장기화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 요인이 가세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갔다. 결정적으로 2022년에 들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현재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해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의 원유 수출은 전 세계 시장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 에너지 가격 전반의 랠리로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 수급 불안은 다른 원자재로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OECD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산 밀의 세계 수출 비중은 30.0%에 달하며, 팔라듐(세계 시장점유율 25.1%), 비료(23.4%), 옥수수(14.6%), 니켈(13.8%) 등도 높은 비중을 가진다. 특히 여기에 더하여 많은 농산물 품목들이 올해 초 이상 고온 현상과 가뭄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 심화되고 있다.

<그림 4-2>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원자재 수출의 대세계 비중(2020년 기준)



자료: OECD(2022).

문제는 시장의 공급이 부족함에 따라 일부 품목에서 자원수출국들이 공급을 중단하면서 자원 안보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4월 식용유와 식용유 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인도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밀의 안정적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지난 5월 밀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4) 중국발 공급망 교란

최근에 벌어지는 다양한 공급망 교란은 자원 안보, 외교적 보복의 수단, 기술 패권 경쟁, 방역 상황 악화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것에 상관없이

* agriculture와 inflation의 합성어로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유발된 고물가를 의미한다.

중국발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공급망 교란은 그 배경 상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미·중 간 패권 경쟁의 영향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차량용 반도체 생산 기업인 SMIC를 제재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의 품귀 현상이 나타났고 그 영향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또 다른 예가 2021년 하반기에 이슈가 되었던 요소수 사태이다. 호주 정부가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동참하면서 중국 정부가 호주산 철광석과 석탄 수입에 대해 제재를 가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석탄 화합물의 공급이 부족하게 되었고 그중 하나인 요소 생산도 급감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산 요소 수입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중국산 요소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우리나라에 요소수 품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둘째, 팬데믹으로 인한 중국 내 생산 차질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중국에서 시작되었던 2020년 초 중국 내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의 의존도가 높은 와이어링하네스(Wiring Harness) 생산이 크게 차질을 빚었다. 이에 국내 자동차 조업이 일시적으로 멈춘 적이 있었다. 이러한 코로나19발 공급망 교란은 최근에 다시 재현되고 있다. 중국 내 오미크론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상하이와 베이징이 약 2개월간 도시봉쇄에 들어갔다가 최근에야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산업생산은 3월 전년 동월 대비 5.0%에서 4월 -2.9%의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비록 최근 중국의 방역 상황이 안정되고 있지만, 문제는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집하는 데에 있다. 앞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다시 봉쇄 조치로 대응하는 사례가 주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중국발 공급망 불안이 또 이슈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블록에 대해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출 규제에 나설 가능성도 우려된다. 군사 또는 영토 측면에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국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할 명분은 없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적 헤게모니 확보가 중국의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는 중국 사회 내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이에 맞서야 한다는 논리가 정립되면, 중국 정부가 이 수단을 사용하면서 또 다른 중국발 공급망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5) 신냉전, 경제 블록

기술 패권 전쟁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소극적 ‘견제’라면, 경제 블록의 이슈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봉쇄’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 이전의 경제 블록은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나 RTA(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무역협정)를 중심으로 하면서 회원국들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적 성격이 강했다. 그러한 예로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 AFTA(ASEAN Free Trade Area, 아세안자유무역지대), MERCOSUR(Mercado Comun del Sur, 남미공동시장)**,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이사회)***, EU 등을 들 수 있다. 이 경제 블록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간 공동체로 역내에서는 교역과 투자의 국경 이동 제약을 크게 낮추고, 역외 국가들에 대해서는 배타적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회원국들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한다. 동아시아에도 다자간 무역협정 기구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일본이 주도하는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와 중국 중심의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다. 두 기구의 주된 목적이 비록 경제 협력에 있지만, 애초 중국에 대한 견제와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라는 정치·외교적 목적도 존재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CPTPP에 미국이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에 아세안은 물론 한국과 호주 그리고 CPTPP를 주도하는 일본마저 가입하면서 두 기구의 구분조차 모호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정치·외교적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제 블록이 만들어졌다. 바로 미국이 주도하는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이다. 아직 IPEF가 회원국들이 지켜야 할 규범의 내용과 수준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아시아를 포함한 환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IPEF가 내세우는 가치는 기존 FTA와 같은 전통적 경제 블록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기존 경제 블록이 무역이나 투자 장벽의 해소에 있었다면 IPEF의 목적은 공정무역, 탈탄소, 디지털 시장 규제, 공급망 안정 등이다. 이는 신산업의

*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회원국이다.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이 회원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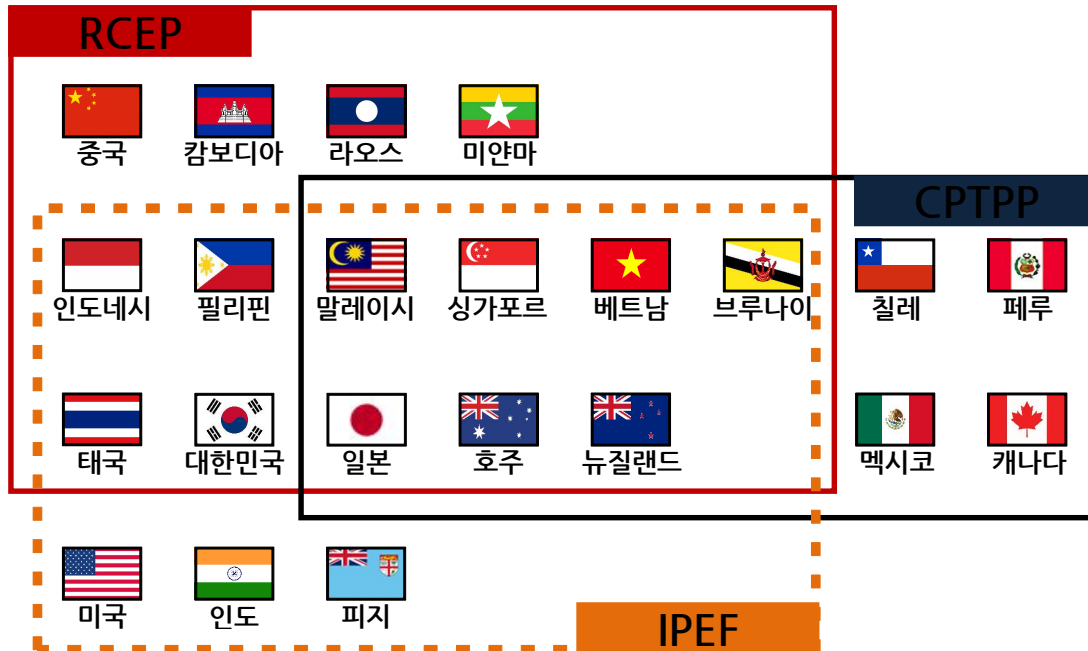
***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가 회원국이다.

****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이 회원국이며 중국과 한국도 최근 가입을 신청하였다.

***** 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회원국이다. 한국은 국회 비준을 거쳐 2022년 2월 발효되었다.

* 현재,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와 ASEAN 10개국 중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7개국이 참여한다.

<그림 4-3> CPTPP, RCEP, IPEF 회원국 현황



자료: 2022년 6월 현재 기준.

핵심기술과 국제표준을 주도하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고, 더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의제들이 중국에 매우 걸끄러운 이슈라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IPEF에서 제시될 규범을 따라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은 최근 판도가 바뀌는 글로벌 산업 지형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측면에서의 Quad(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4자 안보 대화)와 더불어 경제적 측면에서의 IPEF가 미국이 중국을 국제사회 질서에서 배제하고 고립시키는 주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3. 한국의 경제 안보 전략

1)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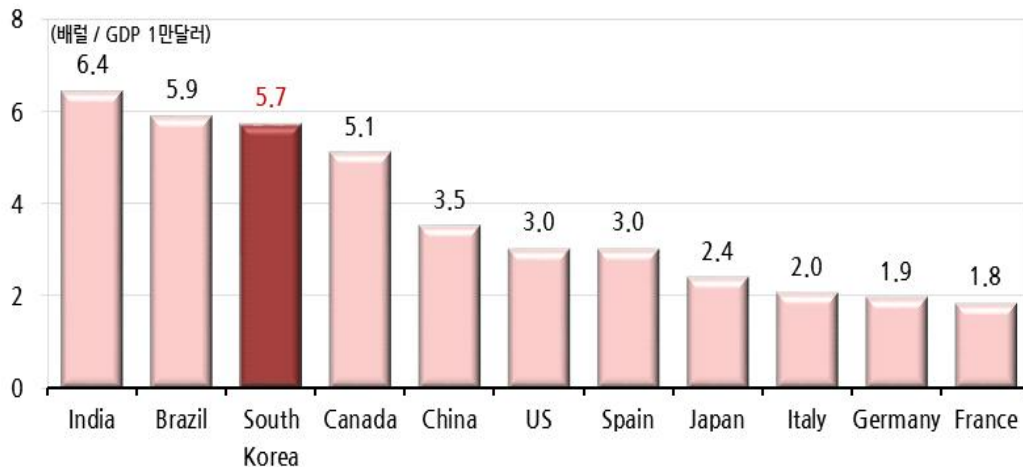
새로운 국제 통상 질서의 핵심 이슈인 경제 안보가 그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실은 한국 경제에 부담이다. 경제 안보가 강조되면 글로벌 교역이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경제 규모 세계 10위**의 강국이기는 하지만, 내수보다 교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취약성을 가진다. 따라서 경제 안보라는 이슈가 전혀 달갑지 않다. 우선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경제 성장이 수출에 의

*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국이 참여하는 안보회의체이다.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22 기준이다.

존하는 바가 크다. 글로벌 교역의 이동성이 하락하면 한국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다. 나아가 더 문제인 것은 한국은 자원빈국(資源貧國)이기에 수입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OECD 37개 회원국* 중 경제 규모 대비 가장 많은 석유를 소비한다. 현대경제연구원(2022)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GDP 1만 달러 당 원유 소비량은 5.7배럴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는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용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특히, 우리는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이다. 지금처럼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 국내 인플레이를 심화시키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내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그림 4-4> 주요국 원유의존도(2020년)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22b).

경제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면서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게 된다.

한편, 소재·부품 공급망의 불안은 우리 기업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대부분 공업 제품들은 다양한 소재와 부품들의 결합체이다. 또한 물성(物性)이 단순한 화학이나 철강 등의 기초소재 산업의 경우에도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 촉매제, 환원제 등 많은 재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정상의 수많은 소재나 부품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차질이 발생하면 생산이 중단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다양한 이유로 글로벌 공급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제조업 중심 국가인 한국 경제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에 대두되는 중국발 공급망 교란은 심각한 문제이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임과 동시에 최대 수입국

* OECD회원국은 38개국이나, 이중 관련 통계가 없어 석유 의존도 계산이 어려운 코스타리카는 제외한다.

** 국회예산정책처(2021)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1.0%, 식량자급률은 45.8%이다.

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이 수입하는 중간재의 약 28.4%가 중국에서 온다. 또한 자본재의 경우는 중국산 비중이 32.0%에 달한다. 그런데 최근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이 중국을 배제하면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만약 우리가 미국 중심의 경제권에 들어갈 경우, 한·중 간 공급망의 안정성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요약하면 한국 경제는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 시스템에서 경제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붕괴되는 현실에서 한국 경제가 받는 부정적 영향은 결코 적지 않다. 지금의 통상 환경은 기존 ‘세계화를 통한 글로벌 협력’에서 ‘블록 내 응집과 블록 간 대립의 양상’으로 크게 방향을 틀었다. 더구나 오로지 경제적 이익만이 목적이었던 시대를 넘어 정치, 외교, 군사적 전략까지 고려된 ‘경제 안보’라는 이슈는 복잡한 쟁점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따라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와 그 변화를 주도하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이해가 절실한 시점이다.

2) 대응 전략

이러한 복잡한 환경 속에서 어찌 되었건 해답은 내야 한다. 첫째,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으로 들어가면서 당분간 중국과의 우호적 경제 협력 관계도 지속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되는 신산업들의 핵심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미국 중심의 블록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의 중국에 대한 시장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중국의 이해관계에 끌려가는 것도 감내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정말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중국의 시장 수요와 공급기지의 역할을 대체할 지역이 많지는 않지만,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빠른 발전 속도를 고려해 보면 이들 지역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다. 둘째, 자원 안보는 선진국과의 관계보다는 신흥국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대부분의 자원 수출국은 신흥국이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중국이 자원 부국들에 대한 외교관계를 강화했던 노력을 배워야 한다. 또한 일본이 그동안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원 확보와 공급망 안정을 도모했다는 점도 살펴봐야 한다. 어떤 경우는 ODA나 차관 공여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선 독특한 강점이 있다. 바로 빠른 경제발전 경험과 한류이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많은 개도국과 신흥국은

우리의 빠른 산업 근대화 및 경제발전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한다. 특히 ICT 강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는 많은 나라가 부러워하는 점이다. 나아가 BTS로 대변되는 한류의 확산으로 국격도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우리만의 강점을 살려 자원 부국들과 외교관계의 지평을 넓혀간다면 자원 안보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여 단기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외교적 역량이 요구된다. 그러나 거기에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미리 공급망 위기를 경고할 수 있는 조기 경보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며, 위기 발생 시 민관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동 대응이 가능한 실효적인 협력체가 산업군별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 물론 국산화가 좋은 전략이 되겠으나, 모든 것을 국산화하는 것은 기회비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중요한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국산화를 염두에 둔 R&D 투자는 확대하되, 병행하여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사실 경제 안보는 그 자체가 새로운 트렌드는 아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가 새로운 힘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편되는 과정상의 혼란에서 강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즉,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이슈들은 아니다. 문제는 최근의 혼란이 정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앞으로 국제 통상 질서는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정부와 기업의 대응 역량이다. 위기 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지할 수 있고, 문제점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한국 경제의 ‘대응 역량’을 키우는 것이 경제 안보 전략의 핵심이다.

참고문헌

- IMF WEO database(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2/April).
- 소부장넷(www.sobujang.net).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OECD(2022),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March 2022」, OECD Publishing.
- 국회예산정책처(2021), 「곡물 수급 안정 사업·정책 분석」, 나보브리핑 제113호.
- 현대경제연구원(2017). 「트럼프노믹스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주평, 17-4.
- (2018). 「관세 전쟁의 시작과 한국 경제의 위기」, 현안과 과제, 18-11.
- (2019).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경제주평, 19-26.
- (2021). 「경기 회복의 걸림돌, 3대 리스크 요인과 시사점」, 경제주평, 21-23.
- (2022a).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 슬로플레이션 가능성 점증」, 경제주평, 22-02.
- (2022b). 「OECD 1위의 경제 원유의존도, 그 개선이 시급하다」, 현안과 과제, 22-02.

Korea's Economic Security Strategy in the Post-Corona Era

Joo, Won

The core agenda of "economic security" has recently been positioned as a strategic goal of all countries, and free trade is retreating. Based on this paradigm, the new trade trend that we should focus on after the Corona crisis includes (1) export controls used as diplomatic retaliatory measures, (2) new international order, competition for technology hegemony, (3) rise of resource security, (4) disturbance of supply chains from China, (5) new Cold War, economic bloc.

This trend usually means that the environment changes from the existing "global cooperation through globalization" to "in-block aggregation and block-to-block confrontation". Moreover, the issue of "economic security," which takes into account political, diplomatic and military strategies beyond the era when economic interests were the sole purpose, demands complex calculations from us.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understand the changing global trade trend and the invisible forces that lead the change. Amid these complex changes, we must first enter the U.S.-centered economic bloc and maintain friendly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for the time being. At the same time, efforts should be made to reduce dependence on China. Second, resource security should focus on relations with emerging countries rather than relations with developed countries. We must expand our diplomatic relations with resource-rich countries by highlighting our economic development model, digital infrastructure, and K-wave. Third,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supply chain of cor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 the long term while relying on the government's diplomatic capabilities to cope with the unstable supply chain in the short term. Finally, the core of the economic security strategy is to develop the ability of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to preemptively detect crisis factors, quickly grasp problems, and respond systematically and efficiently.

우크라이나 사태와 세계질서의 재편, 한국의 대응 전략

김선래*

1.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특수군사작전이라는 미명하에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를 노리고 벨라루스에서 진격했으며 동시에 8년째 내전 중인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했다. 전쟁 시작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 20킬로미터까지 진격한 러시아군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점령당하는 것을 시간문제로 보았던 많은 군사전문가의 시각과는 달리 우크라이나군은 키이우 외곽에서 러시아군을 저지하였다. 같은 시간 돈바스 동부를 진격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리키우(하리코프) 입구에서 진격을 저지당하는 등 전쟁 초반에 러시아의 의도와는 달리 진격 속도가 떨어졌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방어를 뚫지 못하고 수도 키이우를 노리고 들어갔던 부대를 철수시켰다. 이에 러시아군은 작전 2단계로 전력을 우크라이나 남동부에 집중하여 돈바스 지역을 탈환하고 남부 우크라이나 헤르손 주와 자포로지예 주를 공략하여 대부분 점령했다. 돈바스 전쟁의 결정적인 분기점은 돈바스 지역 항구도시인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공장에서 러시아군에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아조우 부대와 외국인 용병들을 포로로 잡으면서 승기를 잡았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부는 전쟁 발발과 동시에 수도를 버리고 르비우(르비프) 지역으로 후퇴하라는 미국과 나토의 제안을 거부하고 수도 키이우에 남아 영웅적인 항전을 하여 러시아의 1단계 작전인 수도 점령과 괴뢰정부 구축 시도를 분쇄했다. 전쟁이 시작된 지 5개월이 넘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은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서 전

*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초빙교수

러시아 Institute of World Econom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정치학 박사

** Обращ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4 февраля 2022 года,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67843>(검색일: 2022.07.25)

선이 고착화하는 현상을 보이며 러시아는 우월적 화력을 바탕으로 돈바스의 루간스크 주를 탈환하고 도네츠크주도 거의 확보해 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와 서방의 군사물자 지원과 전투 장비 지원으로 불리한 전황을 뒤집어 동남부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 전투는 어느 한쪽이 완전한 승리로 이어지기는 힘든 구조를 띠고 있으며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우크라이나군의 피해와 러시아군의 피해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러시아군은 전쟁 초기 기동성을 바탕으로 하는 기계화 대대 전술단*을 중심 타격하는 전술을 사용하여 우크라이나 깊숙이 진격하였으나 미국이 제공한 개인용 대전차 화기인 재블린에 속절없이 파괴되었다. 이에 2단계 작전은 중심 타격 전술에서 집중 화력을 사용한 초토화 작전으로 변경하여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하나하나씩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하면서 기계화 부대와 전투병을 투입하는 양상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초토화 작전은 2000년 초에 러시아와 체첸 간의 전투에 사용했던 러시아군의 전술로 체첸전이 끝난 후 체첸 공화국 수도 그로즈니는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그만큼 민간인들과 병사들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지독한 전쟁 전술이다.

앞으로 러시아는 동남부 전투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야금야금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원하는 전쟁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우크라이나를 굴복시켜 친러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현 젤렌스키 정부를 타격하여 전복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러시아는 젤렌스키 정부 제거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은 러시아가 동남부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여 우크라이나를 분할 점령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이미 거의 이루었다고 보며 점령지역을 우크라이나에 되돌려주려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가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상을 통하여 우크라이나를 중립적인 연방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돈바스 지역의 자치권과 그 외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 자치권을 부여하여 우크라이나를 연방국가로 만들어 러시아의 통제하에 두려는 전술이다. 이 이외에 고려하는 시나리오는 없거나 아니면 러시아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나리오이다.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을 수복하는 일은 가능할 것인가? 이에 대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겠다.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하면서 내세운 군사작전의 목표가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와

* 대대전술단(BTG)은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전쟁을 치르며 고안한 부대 편제다. 대대급(600~800명) 부대가 현장 지휘관 재량권을 바탕으로 기동성 있게 운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이경훈, 2022)..

탈군사화였다'. 이 두 가지 목적이 달성되면 러시아가 철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그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번 전쟁의 원인과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국제관계가 70여 년 전의 한반도와 매우 유사하게 닮아있기 때문이다. 전쟁이 발발한 원인으로 보면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갈등, 내부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내부의 지역 갈등 등이 있지만 외부적으로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미중러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미·러의 전략적 목표가 충돌했기 때문에 전쟁의 양상은 복잡해졌고 전쟁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1) 미국이 러시아를 대신하여(?) 우크라이나 침공 협박

실제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이미 2014년 2월부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유로마이단 사태가 터지고 친러 성향의 우크라이나 대통령 야누코비치가 수도를 탈출(러시아는 쿠데타라고 칭함)하면서 유로마이단 혁명이 성공하고 임시정부가 들어선 그 순간에 돈바스(루간스크와 도네츠크)에서 임시정부에 대항한 군사적 봉기가 시작됐다. 초기에 돈바스 반군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화력에 밀려 대부분 지역을 빼앗겼고 이에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우크라이나군을 막아낸 것이다.

그 이후 전쟁은 러시아가 개입하여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전쟁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러시아군이 군에서 전역한 후 의용군으로 참전하는 형식이었지만 그런 방식으로 러시아군이 참전한 내용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독일과 프랑스가 참여하는 제1차, 제2차 민스크협정을 통하여 양측이 휴전에 합의했지만, 민스크협정에서 우크라이나가 많은 양보를 했다고 생각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무력으로 돈바스를 제압하려고 했고 이번 전쟁 직전인 2021년과 2022년 1월, 2월 돈바스에서 소규모 충돌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2) 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기회는 여러 번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 전쟁 직전까지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내용을 미국이 예견하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됐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돈바스에서 전쟁 수위가 높아져 가는 상황을 해소하려고 했다. 러시아는 전쟁으로 향하는 조건들을 회피하고자 전쟁 직전인 2021년 12월 15일, 미국과 NATO에 러시아와의 안전보장에 대한 협정안을 제시했다^{*}. 맥락상 러시아가 평화 협정인 안전보장협정을 제기한 것으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Обращ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news/67843> (검색일: 2022. 07.11)

** 본 협정안의 공식 명칭은 「러시아와 나토 회원국의 안전보장 조치에 관한 협정」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

로 볼 수 있다. 2022년 2월 17일 러시아는 다시 한번 러-나토 안전보장협정문을 제시하면서 미국의 결단을 촉구했다. 안전보장협정의 주요 내용은 상대의 안보 존중, 나토의 추가 확장 배제, 상대를 겨냥한 무기와 군대를 1997년 이전으로 재배치,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금지 등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 NATO는 러시아가 제시하는 주요 요구를 거부하고 경고와 압박으로 대응했다.

러시아의 전쟁 회피 노력과는 달리 우크라이나는 2019년 2월 21일 헌법개정을 통하여 러시아가 가장 안보적으로 우려하는 EU와 NATO 가입을 헌법 조항에 넣었다.* 그리고 돈바스 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지원을 받아 국방력을 강화했다. 최근엔 적극적으로 유럽연합 가입 의사를 밝히고 나토 가입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 지지도 얻어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의 정치 양극화는 미국과 러시아라는 외세에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약점으로 작용한다.

2.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역사적 근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키이우 루스라는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역사에 속해 있는 하나의 지역이다’라고 말했다.**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를 역사적, 문화적, 인종적으로 같은 국가라고 본다. 우크라이나는 키이우 루스에서 출발한 우크라이나가 역사의 주

류이며 러시아와는 다르다는 역사적 시각을 지니고 있다. 우크라이나 중부와 동남부는 제정러시아 시기 직접 통치를 받았으며 소비에트 시기에도 한 국가였다. 그러나 <그림 5-1>에서 보듯이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는 역사적, 인종적, 언어적으로 다른 경로를 걸어왔다. 우크라이나 서부

<그림 5-1> 우크라이나 영토 확장 역사



остранных дел РФ, “Соглашение о мерах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государств-членов Организации Североатлантического договора,” 17.12.2021.
https://mid.ru/ru/foreign_policy/rso/nato/1790803/?lang=ru (검색일:2022.07.08.)

* <https://www.refworld.org/pdfid/44a280124.pdf>

** “Прямая линия с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30 июня 2021 года,”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65973>(검색일: 2022.07.25)

의 중심도시 르비우와 그 주변 지역은 역사적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헝가리의 지배를 받았으며 최근에 소련에 복속된 지역도 있다. 이러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국의 첨예한 역사 논쟁은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우크라이나라는 국호가 처음으로 공화국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나 곧바로 소비에트 연방에 귀속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오랜 역사적 동질감과 민족적 단일성은 우크라이나 공화국이 독립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독립 이후 키이우 권력을 두고 동남부의 친러시아 지역과 서부의 친서방 지역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르비우는 러시아와는 다른 민족과 역사 그리고 언어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 지역은 1400년대 몽골 통치 이후 폴란드 귀족들이 주로 통치하였으며 헝가리,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가 번갈아 지배했던 곳이다. 이는 국내 정치 구조에 반영되어 우크라이나 내 친러 권력과 친서방 권력이 교대로 집권하는 정권교체가 발생했으며 정권을 놓고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다. 2004년 우크라이나에 서방의 지원을 받아 색깔 혁명이 발생했고 친서방 유셴코 정권이 등장했다. 모스크바는 색깔혁명 배후에 미국이 있으며 미국의 지원을 받는 국제 NGO 조직이 색깔혁명을 주도하였다고 보았다. 이후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연이어 발생한 색깔혁명은 러시아에 큰 위협으로 다가왔으며 이때부터 친서방 성향의 러시아가 서방에 대한 강한 불신과 반감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2014년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지원을 받은 일단의 세력이 유로마이단 사태를 일으켜 친러 정권인 야누코비치 정권을 붕괴시킨 것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2014년 크림병합도 러시아인들은 크림반도가 러시아 영토를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크림반도는 소련 서기장이었던 니키타 흐루쇼프가 러시아 행정구역에 있었던 크림주를 페레야슬라프 조약 300주년 기념으로 우크라이나에 선물로 주었다. 이 당시 단순하게 행정적 지역 변경이었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소련이 붕괴하면서 곧장 갈등이 시작되었다. 이미 크림은 소련 붕괴 직전인 1991년에 자치권을 획득했으며, 그해 9월에는 주권 공화국임을 선포했다. 이에 1990년대 초부터 크림반환 운동이 러시아 내에서 발생했고 흑해함대가 있는 세바스토폴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는 1956년 당시 흐루쇼프가 크림만 행정구역을 우크라이나로 변경하고 크림반도 안에 있는 세바스토폴 항구를 러시아 행정구역에 그대로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1992년 1월 러시아 의회는 크림주를 우크라이나에 양도한 흐루쇼프의 행위에 대해

여 적법성을 검토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국경선 재조정을 결의했다. 1992년 2월에는 크림 자치공화국은 자체적으로 크림공화국으로 승격했으며, 이어 5월에는 독립을 선포했다(우준모, 2004).

1994년 크림공화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메쉬코프는 크림의 분리독립을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와 정면충돌했다. 1997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체결된 대우호조약에서 상호 국경의 불가침성과 영토의 통일성에 합의했으나 크림 영유권을 주장하는 러시아 국내 정치세력으로 인하여 2년여간 의회 승인을 받지 못했다. 1999년 3월 우크라이나 의회와 러시아 상원인 연방회의에서 러-우크라이나 우호 협력 조약이 승인되었다. 이 조약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에 세바스토폴과 크림을 양보했다고 러시아 내 보수세력은 옐친 정부를 비판했다(두진호, 2009).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러시아 국민 중 크림반도 합병에 대하여 당연하다고 보고 있으며 크림이 러시아 영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3.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

1) 미국의 입장

미국은 앞으로 미국의 패권적 질서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로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을 상정하고 있다. 러시아는 핵으로 무장한 군사적 영역 이외에는 미국의 패권적 질서에 도전할 수 없는 국가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많은 측면에서 빠르게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반도체와 IT, ICT 부문 그리고 5G, 6G, 인공지능, 드론, 무인기, 전기자동차, 양자산업, 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기술 패권을 놓고 겨루고 있다. 4차산업혁명에서 기술 패권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세계 패권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러한 권위주의 국가들이 연합하여 대항하는 국제현실에서 자신의 역량 외에 동맹 및 지지국의 세력을 규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전통적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호주와 더불어 역외 세력인 나토까지 연결하려 한다. 미국은 강대해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티베트와 신장웨이우얼 문제, 대만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동시에 유럽연합을 권위주의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이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큰 그림에서 유럽연합은 자신의 질서 내에 혹은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러시아는 그러한 진영 구분에 있어 훌륭한 적대국가이다. 러시아가 세계 규범과 질서를 위반하는 국가로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국가이며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 국가로 존재하는 것이 미국이 창조하는 세계전략 구도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 그다음 조건으로 유럽연합이 미국의 통제하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단의 미국 내 네오콘은 가장 안정된 세계질서를 양극 체계로 보고 있다. 이들은 세계가 권위주의 국가군과 자유민주주의 국가군으로 구분되고 이들 진영이 맞서 경쟁하는 체제를 선호한다. 이를 위하여 유럽연합이 러시아와 중국으로 연결하여 거대한 유라시아 경제공동체에 편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먼저 유럽연합을 유라시아 공동체에서 단절시키고 미국의 통제하에 들어오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입장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미국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유리하다.

2) 러시아의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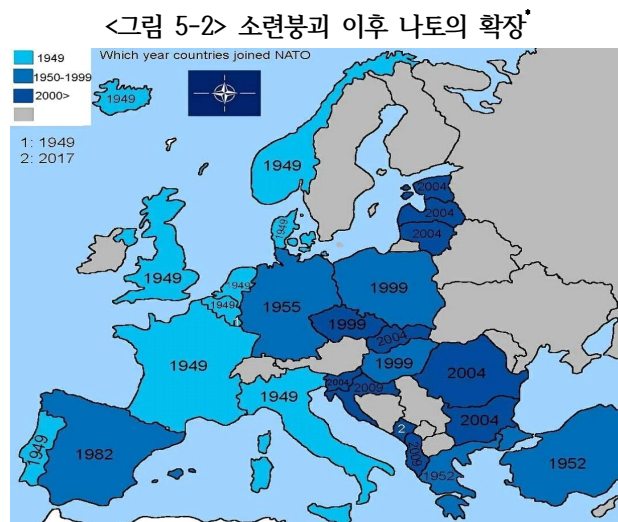
러시아는 세계질서를 놓고 미국과 겨루어 패권을 장악하려는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보겠다. 러시아의 국력은 GDP 기준으로 세계 11위로 한국과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고 있다. 물론 광대한 영토와 무진장한 지하자원을 계산한다면 한국보다는 훨씬 부유한 강대국이다. 그렇지만 미국을 상대하기에는 전반적으로 국가 기술 수준과 금융 등 경제 능력이 많이 뒤처진다고 보겠다. 그 때문에 러시아가 추구하는 국제질서는 미국의 일방주의 행위에 대항하는 다극적 질서를 선호한다. 미국이라는 일극 체제가 아니라 유라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 유럽연합, 상하이협력기구, 중남미, 아세안, 중동, 인도 등 소 다자그룹들이 안정적으로 세계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형태를 원한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는 처음부터 매우 어려운 함정으로 파악하고 회피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판단한 푸틴 행정부가 선제적 기습을 감행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

2021년 7월 2일 승인된 러시아연방 국가안보전략에서 미·러 전략경쟁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이 자세히 적시되어 있다. 제35조에 러시아를 겨냥한 나토의 군사시설 건설과 외부로부터의 공격 그리고 러시아 동맹국에 대한 압력을 언급하면서 나토의 동진정책이 러시아 군사 위협으로 본다는 입장이 적혀있다. 이에 대항하여 101조에는 중국과의 포괄적 파트너십 관계, 인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 구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EAEU(유라시아경제연합)와 군사협력 기구인 CSTO(집단안보조약기구)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SCO(상하이협력기구)와 BRICs와의 협력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고립과 경제적 손실을 회피하려는 차원에서 브릭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중시한다는 내용이다. 브릭스 국가뿐 아니라 러시아

에 호의적인 아프리카 국가들과 중남미 국가들 그리고 중동과 새로운 블록을 형성하여 서방과 긴 경제전쟁에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3) 유럽연합의 입장

유럽연합의 중심국가는 독일과 프랑스이다. 이 두 나라가 실질적으로 유럽연합을 이끌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 2014년 돈바스 내전에 러시아가 개입하면서 유럽연합과 미국은 대러시아경제제재 조치를 발동하였다. 이 제재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까지 이어져 오다가 전쟁 발발 이후 서방은 더 강력한 대러시아금융제재 조



치를 취했다. 대표적인 조치로 SWIFT에서 러시아의 주요 은행들을 제외하는 것으로 러시아 대외수출입에서 커다란 장애가 발생했다. 또한 러시아 정부 해외계좌를 동결 혹은 압수하였으며 서방에 있는 러시아 개인 자산까지 압류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에 대하여 서방측이 단일대오를 형성하여 진행해 나가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 산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제재로 인하여 세계 에너지 가격의 폭등과 식량 가격의 폭등 그리고 인플레이션 충격으로 서방의 여러 국가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가스공급이 제한받고 있으며 가스공급의 악화가 전반적인 국가 경제에 영향을 주어 경제 자체가 가라앉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에 친서방정권이 들어선 2004년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가스분쟁으로 인하여 유럽연합이 여러 번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러시아와 독일은 발트해 해저 가스관을 건설했다. 노르트스트림 1, 2가 그것이며 노르트스트림 1은 이미 2011년 9월 6일 완성하여 연간 550억m³의 가스를 독일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오고 있었다. 노르트스트림 2는 2021년 9월에 완성했으나 미국의 방해와 반대로 개통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 이 가스관을 두고 유럽연합인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에 강력한 항의와 경고를 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의 의지를 꺾지 못하고 개통이 중단

* <https://zen.yandex.ru/media/makropolit/zachem-byl-nujen-varshavskii-dogovor-5d641de2c31e4900ad8a5350> (검색일: 2022.07.22)

되었다. 미국은 명분상 유럽연합에 대한 러시아의 에너지 지배권을 경계한다고 했지만, 진실은 미국산 셰일가스 수요처인 유럽연합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값싸고 편리한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유럽 시장에서 배척되고 앞으로는 광대한 유럽연합 가스 시장에 비싼 미국산 셰일가스가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기 힘들다. 미국산 셰일가스는 미국 내 생산도 중요하지만, 수출을 위한 터미널 건설과 운반 LNG선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여 적어도 2~3년간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4) 중국의 입장

중국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과의 갈등을 극복하고 2049년 부강한 사회주의 강대국 건설과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중장기전으로 인식하여 2035년에는 미국을 추월하는 사회주의 현대화 달성과 부국강병의 신 대장정을 선포했다. 미국과는 정치와 가치경쟁, 홍콩사태, 대만 해협 문제, 신장 웨이우얼 문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Quad) 오커스(AUKUS)를 놓고 본격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중국은 기존의 서구식 자유주의 질서와 차별화된 중국식 사회주의제도, 질서, 가치, 이념을 강조하면서 중국 특색사회주의 강대국 건설에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에 미중 패권 경쟁이 목전에 도달했고 이제 시간적 여유가 얼마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각성시키고 있다. 중국 내 주요 안보 전문가들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면서 미국의 대중 군사 안보 포위 봉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7.1% 수준의 국방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은 중러관계는 중요한 양자관계이며 러시아 침공에 대한 국제적 분위기가 어려워도 중러 포괄적-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 강조하고 중러 간 전략적 안보 공조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러 간 전략적 안보협력뿐만 아니라 경제와 인적교류 분야 등에서 긴밀한 대응과 공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적으로는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도 존중받는 차원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상호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 国务委员兼外交部长王毅就中国外交政策和对外关系回答中外记者提问,『中央人民政府網』2022年 03月 08日.

이처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러관계는 매우 밀접하고 공고한 관계가 되었으며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운명공동체가 되었다. 특히 베이징 동계 올림픽 때 열린 중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나토(NATO)의 동진과 인도-태평양 전략(쿼드, 오커스 등)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표시하고 중러 안보협력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중러 양국 정상은 미국 주도의 일방주의적 국제질서에서 탈피하여 다자주의 국제질서 구축을 강조하면서 중러 간 전략적 안보협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崔洪建, 2022).

4. 신국제질서와 한반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포스트코로나 이후 세계 패권을 놓고 벌이는 대서양 세력과 유라시아 세력의 충돌이며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미국의 경제와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거대게임이라 보겠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식량과 에너지 및 지하자원 공급망에서 양대 진영은 급격히 분리되고 있으며 세계질서는 앵글로색슨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 진영 국가와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권위주의 국가 블록으로 재편되고 있다. 한국에 위협적인 요소는 유럽대륙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결 구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에서 전면화된 가치논쟁은 1945년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시작된 이데올로기 논쟁과는 또 다른 성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40년대 후반에 공산주의 대 자유민주주의의 대결로 세계가 양분되었던 그때와 권위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으로 양분되는 지금의 국제정세는 성격상 많이 유사하다. 미국은 가치논쟁을 전면화하여 기존의 국제질서와 국제규범, 국제기구, 제도와 같은 자유민주주의적 제 가치를 존중하고 준수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미 경제적 영역에서 미중러 그레이트 디커플링은 천천히 진행 중이다. 누가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갖느냐가 차기 기술 패권을 차지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강대국들은 반도체, IT, ICT, 5, 6G, 양자컴퓨팅,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에서 그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양 진영 간 기술장벽을 쌓아 상대 진영에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다양한 노력이 무역과 금융 그리고 제조, 공급망, 에너지 부문 등 전 경제적 영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1945년 이후 나타난 냉전 구조와는 다른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정권의 진영논리를 신냉전이라고 부른다. 신냉전의 3가지 주요 요소는 진영 간 가치논쟁, 그레이트

디커플링, 그리고 군사적 충돌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신냉전이 구성 되는데 결정적 요소가 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은 전 세계 지정학적 충돌지점을 크게 5개 지역으로 보고 있다. 그 지역은 1. 우크라이나, 2. 아프가니스탄, 3. 남중국해, 4. 대만해협, 5. 한반도이며 이 지역을 놓고 미국(서방)과 중국(러시아)간 제2차 그레이트 게임(second the great game)은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도 2021년 7월 2일 러시아 대통령에 의하여 승인된 ‘러시아연방 국가안보전략’을 살펴보면 한반도를 핫스팟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제36조에 러시아 인근 지역과 중동지역, 북아프리카와 한반도를 고조된 분쟁지역으로 적고 있다. 여기서 한반도를 ‘핫 스팟’으로 본다는 러시아의 전략적 시각을 엿볼 수 있다.

5. 나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적 차원에서 포스트코로나 이후 신질서 도래의 서막이며 미중러 패권 경쟁의 시작을 의미한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받은 중국과 러시아는 강화된 국력과 경제력으로 세계질서를 변경하려는 수정주의자로 부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에 맞서 공동으로 다극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과 러시아연방 국가안보전략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 11월 30일 승인된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을 보면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를 공고히 하고 국제사회에서 일방주의적 행동을 하는 미국에 맞서 다극질서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여 재편하려는 신국제 질서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러시아와 중국, 인도, 그리고 기타 여타국가들은 다극적 국제질서를 선호한다. 이와는 달리 미국의 신 네오콘은 가장 안정된 국제질서를 양극체제로 본다. 이들은 세계 경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연합과 앵글로색슨 국가들인 파이브 아이즈, 일본과 한국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따르는 국가들만으로도 충분히 미국의 영광을 지속할 수 있다고 본다. 제조업에서의 밸류체인 중단과 다양한 공급망의 단절을 통하여 권위주의 국가들과는 구분된 서방세계 내에서 미국의 지위를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대외정책 노선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기

존 중국과의 교역과 투자, 러시아와의 교역과 에너지 자원 수입 같은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한국의 대외전략에 수정이 필요해졌다. 한국의 대외전략 수정에 앞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 차원의 분열과 변화를 먼저 정확히 읽고 그에 대응해야 한다.

1) 누가 세계질서를 변화시키려 하며 그 변혁의 정도는 어떠한가?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주도 세력은 미국과 영국을 위시한 앵글로색슨 국가인 파이프 아이즈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는 중국과 인도 그리고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국제 질서가 그들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진입하기 전에 이러한 흐름을 적극적으로 끊어 놓으려고 한다. 즉 아직 질서를 변화시킬 힘을 가진 미국이 주도하여 미국이 원하는 질서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려고 한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원하는 구도에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맞대응하는 형상이다. 결국 그럴 능력을 지니고 있는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는 구축될 것이나 그 형태는 미국이 그린 구도와는 조금 다른 형태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미국의 질서에 맞서 대응하는 국가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에 그렇다. 그렇다고 할지언정 미국이 원하는 패권국의 지위는 향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현 국제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수정주의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하고 있으나 이는 미국이 미국의 일극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만일 미국이 도전국을 제압할 수 있다면 현 국제질서를 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 러시아를 붕괴시키려고 하는가?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필요하다. 러시아는 미국이 구상하는 신질서 속에서 상대 진영에 필요한 존재라는 점이다. 더욱이 그 상대 진영에 중국이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미국이 유럽연합 즉 독일을 제압하고 유럽연합과 유라시아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국제협력을 제한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전쟁은 우크라이나 땅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그 전쟁의 목표는 미국이 달성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 때문에 많은 국제정치학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의 대리전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와 대비되게 러시아는 서방의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를 받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유라시아 권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의 붕괴나 푸틴의 정권교체보다는 약화된 러시아가 상대 진영의 강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제한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라고

보겠다.

3)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경쟁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그 결과는?

미국은 중국과 길게는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미국과 기술격차를 두어서 첨단기술 분야만큼은 추월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GDP 규모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지른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현재 주도하고 있는 금융패권과 기술 패권을 빼앗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중국이 세계의 제조업 공장으로 산업국가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미중이 결정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금융 국가로 기술 패권을 유지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한국의 전략적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미국이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유라시아 역내 강국으로만 역할을 제한할 의도가 있고 중국을 영원한 제2인자로 세계 산업생산의 중추 역할을 맡기는 것을 원한다면 한국의 대외전략은 거기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미국의 영향력하에 있는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완전한 결별이 필요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미국은 중러 어느 한 국가를 제거할 수도 없고 그럴 의도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새로운 세계질서를 창조하면서 미국 주도의 금융패권과 기술 패권을 유지하면서, 유라시아 내 중러 두 강국을 두어 서로 견제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신 양극체제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진영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군으로 구분되는 새로운 세계질서라면 한국은 이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하겠다. 왜냐하면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읽고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타국과의 관계 설정에 들어가야만 한국의 국가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5) 한국과 러시아 협력과 교류에 대한 고민

한국은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서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만 한다. 비록 미국의 압력에 의하여 러시아와의 협력과 교류가 상당 부분 제약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비정치적인 부문인 문화와 예술 방면에 대한 교류를 지속해야만 한다. 2021년 기준 한국은 러시아 교역국으로 8위이며 총교역액은 273억 달러이다. 이중 전체 한국 수입 대비 대 러시아 수입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무연탄으로 40.78%에 이른다. 한국의 수입국 중 러시아 순위는 2위이고 1위는 호주

(52% 비중)이다.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의 품목은 백금이고, 세 번째로 높은 비중 품목은 계(냉동 계)이다. 나프타와 유연탄 비중도 매우 높은 편이다. 에너지 연료 수입의존도가 80%인 한국은 러시아 에너지 연료를 대체하는 공급처를 물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 때문에 올해 하반기도 나프타, 중유, 백금 등은 한국의 수입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와 유사한 물량을 러시아로부터 공급받을 것이다. 올해 상반기 한-러 교역은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는 약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할지언정 러시아와의 교역을 한국이 먼저 나서서 제한할 필요는 없다. 미국의 압력에 대비하여 나름의 논리를 강화하고 미국을 설득할 명분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의 지위는 향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5-1).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 러시아를 붕괴시키려고 하는가?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필요하다. 본문에서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미국이 구상하는 질서 속에서 대척점에 서 있는 존재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러시아의 붕괴나 푸틴의 정권교체보다는 약화된 러시아로 러시아권의 역내 강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제한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으로 보겠다.

5-2).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경쟁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그 결과는?

중국과는 길게는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미국과 기술격차를 두어서 첨단기술 분야만큼은 추월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GDP 규모에서 중국이 앞지른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기술 패권을 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중국이 세계의 제조업 공장으로 산업국가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결정적으로 분리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금융 국가로 기술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5-3). 그렇다면 한국의 전략적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미국이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러시아 역내 강국으로 역할을 제한할 의도가 있고 중국과는 영원한 제2인자로 세계 산업생산의 중추 역할을 맡는 것으로 제한하기를 원한다면 한국의 대외전략은 거기에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완전한 결별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러 어느 한 국가를 제거할 수도 없고 그럴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새로운 세계질서를 창조하면서 미국의 금융패권과 기술패권을 유지하면서 두 유라시아 국가를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진영 국가 위에 군림하는 신 양극체제가 미

국이 원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로 본다면 한국은 이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하겠다. 왜냐하면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읽고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타국과의 관계 설정에 들어가면 한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두진호(2009).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 연구 -소비에트 이후 지정학적 변동을 중심으로-. 군사논단, 59, 120~129.

우준모(2004). 크림미아 갈등의 해결 과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22(1)

이경훈(2022). 러시아 총참모대 출신 전문가가 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월간조선 5월호, 330.

崔洪建(2022). 重塑安全架構才能實現歐洲持久和平. 人民日報

Abstract

Ukraine Crisis, Reorganization of World Order, and Korea's Response Strategy

Kim Seun Rae

The Ukrainian War is the prelude to the arrival of a new order after the post-coronavirus, and marks the beginning of the US-China-Russian hegemony. China and Russia, which have fully benefited from the globalization and neoliberal order, have emerged as revisionists who seek to change the world order with strengthened national and economic power. China and Russia are jointly pursuing a multipolar system against the US unilateral policy.

Russia and China cannot readily accept the new international order that the United States is trying to reorganize. The new neo-con of the United States sees the most stable international order as a bipolar system. They believe that countries that follow the values of liberal democracy are sufficient to sustain the glory of the United States. The idea is to solidify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in the Western world, which is separated from authoritarian countries through disruption of the value chain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severance of various supply chains.

Due to the Ukraine war, the existing supply chains such as trade and investment with China, trade with Russia and import of energy resources were shaken, and it was necessary to revise Korea's foreign strategy. Before revising Korea's foreign strategy,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read and respond to the current global divisions and changes.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방위산업 재편 전망과 시사점

장원준*

1. 서론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5개월이 넘어섰다. 세계 2위 군사력을 보유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우크라이나는 수도인 키이우(키예프)를 지켜내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일대에서 밀고 밀리는 격전이 계속되면서 장기전으로 치달는 형국이다. 이러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안보 지형도 급변하고 있다(홍규덕 외, 2022). 미국-NATO-일본-호주-한국 등에 이르기까지 소위 ‘민주주의 진영’과 러시아-중국-북한-벨라루스 등의 ‘권위(독재)주의 진영’ 간 정치, 외교, 경제, 군사, 산업, 공급망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갈등, 진영간 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반길주, 2022).

방위산업 측면에서도 기존 글로벌 질서와는 판이하게 다른 커다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우크라이나 주변국 폴란드와 발트 3국, 독일을 포함한 NATO 주요국들의 국방예산 증액이 앞다퉈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러시아 무기체계 취약성에 따른 신뢰도 저하, 미국과 NATO, 일본 중심의 대 러시아 경제, 금융, 방산분야 제재 등에 따라 세계 2위 방산수출국인 러시아의 위상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셋째, 자국 스스로의 방위산업 역량을 갖추지 않고서는 ‘제 2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목도한 중·후발국들의 자주국방 역량 확보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강대국 전략경쟁(Great Power Competition) 시대 우방국 및 파트너국과의 동맹과 협력이 매우 중시됨에 따라 우방국간 방산공급망(ally-shoring)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국가총력전’ 체제하에서 사이버, 우주 등 다영역 작전(Multi Domain

* 現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Operation)에서 민간의 첨단기술 역량에 대한 국방분야 활용 필요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방위산업의 주요 변화요인들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향후 글로벌 방위산업의 재편 가능성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한 주요 시사점 도출과 함께 향후 보다 강건한 우리나라 방위산업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방위산업 재편 현황과 전망

1. 글로벌 군비경쟁 가속화

지난 2월 24일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주변국들의 가장 큰 변화는 글로벌 군비경쟁이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서 그동안 국방예산 증액에 소극적이었던 독일은 이를 계기로 2023년 무려 1,000억 유로(132조원)의 ‘특별방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글로벌 비즈, 2022). 독일 쉴츠 총리는 ‘독일군의 방어력을 높여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밝히며, ‘2024년까지 국방예산을 GDP 대비 2%로 증액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선일보, 2022). 지난 7월 5일 핀란드와 스웨덴 외무장관은 브뤼셀에서 ‘나토(NATO) 가입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현재 나토 동맹 30개국의 비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뉴시스, 2022). 핀란드 국방예산은 이미 GDP의 2%를 넘어섰으며, 스웨덴도 2028년까지 GDP 대비 2%의 국방예산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러한 국방예산 증액은 우크라이나 주변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세계 최대 국방예산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은 7월 14일 하원 본회의에서 총 8,390억 달러(1,100조원)에 이르는 내년도(2023년) 국방수권법(NDAA) 안을 통과시켰다(한국일보, 2022). 지난 7월 1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일본은 헌법 개헌 의석인 166석(2/3)을 크게 넘는 177석을 차지하여 자민당 외교안보 공약인 ‘5년 내 방위비의 2% 이상 사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Yahoo Japan, 2022). 이에 대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일본을 신뢰한다고 밝혀 ‘적기지 공격능력’을 포함한 일본의 개헌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조선일보, 2022). 결론적으로,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과 동북아시아, 북미, 심지어 중동과 인도, 호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인 국방예산 확대 추세에 불을 당긴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국방예산 증액의 상당 부분은 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생산, 그리고 기존 무기체계 성능

개발 등에 투자되어 당분간 글로벌 군비경쟁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 방산수출 주도국 변화

두 번째의 변화는 러시아의 방산수출 주도국 위상은 점점 하락하는 반면, 미국, 중국, 한국, 터키, 이스라엘 등의 방산수출 위상은 점점 상승할 것이라는 점이다. 러시아는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방산수출 강국의 위상을 자랑하여 왔다. SIPRI(2022)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1)간 러시아의 무기수출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19%를 차지하여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이는 과거 5년(2012~16)의 24%보다 5% 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며, 같은 기간 수출은 26%나 감소했다(Wezeman et al., 2022). 이러한 무기수출 감소 추세와 함께,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향후 러시아의 무기수출 강국의 위상을 크게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과 NATO,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 금융, 방산 분야 제재는 러시아로 하여금 미사일, 전차, 장갑차, 전투기 등에 이르기까지 추가 개발과 생산(제조)을 제약시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지속능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는 평가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러시아 무기체계의 대량 파괴와 오작동, 불량 부품 사용 문제 등은 러시아 무기체계의 글로벌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SIPRI 시몬 베제만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무기체계의 글로벌 신뢰성을 크게 상실했으며, 향후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자국 무기수출에 상당한 애로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KIET-SIPRI Zoom 세미나, 2022). 이렇듯, 대전차미사일에 심각한 취약점을 드러낸 러시아 전차와 불량 타이어 문제 등으로 기동력이 크게 제한된 장갑차, 미사일 오작동에 따른 자국 발사지 타격 등에 따라 러시아 무기를 주로 수입해 오던 인도, 중국, 이집트 등의 향후 무기구매 의사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나우뉴스, 2022).

이러한 러시아 무기수출의 퇴조는 반대로 이와 경쟁하는 미국과 프랑스, 중국, 심지어 신흥방산수출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과 터키 등에도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은 7월 중순까지 우크라이나에 무려 69억 달러 이상의 군사 지원을 통해 재블린, 스위치블레이드, 다련장로켓포(HIMAR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첨단무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전장에서 검증된 첨단 무기체계는 중장기적으로 전 세계에서 선호하는 무기체계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향후 미국의 글로벌 무기수출을 주

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검증된 터키의 무인기(바이락타르 TB-2)와 영국제 대전차미사일(NLAW) 등도 향후 동급 무기시장의 강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폴란드와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를 포함한 10조원 이상의 무기수출 기본계약(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했으며, 주변국인 동·북유럽과 중동,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무기수입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파이낸셜 뉴스, 2022).

종합해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국 및 NATO, 기타 우방국들의 강력한 제재와 러시아 무기체계의 신뢰도 추락 등으로 글로벌 무기시장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방산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원하는 한국을 포함하여 향후 수년간 방산수출 주도국들의 위상 변화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주요국의 방위산업 역량 강화

세 번째로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이 심각한 중·후발국들을 중심으로 자체 방위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가장 먼저 발빠르게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국가는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미그-29 전투기, KRAB 자주포, 탄약류 등을 적극 제공하고 있다(데일리안, 2022). 이에 자체적으로 부족한 군 수요 충족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서방 여러 국가들과의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체코와 슬로바키아, 구 소련 연방국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와 최근 NATO에 가입협정서를 체결한 스웨덴, 핀란드 등에 이르기까지 주요국들은 국방예산 증액을 통한 자국 군사력 확충과 자체 방위산업 역량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동·북유럽에만 국한하지 않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향후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만(Taiwan)을 포함하여 한국, 일본, 호주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여 대만에 금년 들어 네 차례에 걸쳐 패트리엇 방공시스템(약 9,500만 달러) 등을 수출하였다(나우뉴스, 2022). 아울러, 대만은 향후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지난 7월 6일 T-5 용잉 고등훈련기를 시험비행하는 등 자체적인 군사력 증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국제뉴스, 2022).

우크라이나 전쟁이 몰고 온 글로벌 방위산업의 변화는 바로 ‘제 2의 우크라이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우방국과의 동

맹 강화와 함께 자국 스스로의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4) 우방국 중심의 방산공급망 구축 심화

네 번째로 주목할 점은 향후 우방국과 파트너국가를 중심으로 방위산업의 공급망 구축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2월부터 러시아에 대한 미국 및 NATO, 기타 우방국들의 경제, 금융, 방산분야 제재는 향후 ‘민주주의 진영(미국-NATO-한국-일본-호주 등)’과 ‘권위(독재)주의 진영(러시아-중국-북한-벨라루스 등)’간의 공급망 블록화 현상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방국과의 방산공급망 구축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상호국방조달협정(RDP) 체결 28개국들을 중심으로 우방국간 공급망(ally-shoring)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RDP 주요국들과 매월 텔레컨퍼런스를 통해 국방핵심기술 및 첨단 무기체계 공동개발, 생산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Defense News, 2021). 2022년 국가국방전략(NDS)에 따르면, 미국은 취약분야인 초소형 반도체(33억 달러), 극초음속 유도무기 및 지향성 에너지(6.05억 달러), 잠수함(5.43억 달러) 및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장치(4,300만 달러)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향후 이러한 방산공급망 강화 조치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5) 민군간 방산협력 확대

마지막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목도한 바와 같이 앞으로의 전쟁은 국방과 민간의 구분이 거의 없는 ‘국가 총력전(Total War)’이며, 더 나아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이 대립하는 ‘우방국간 총력전(Total War with allies)’의 형태를 띠는 점이다. 특히,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징 중 하나는 사이버와 우주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과 국방분야의 적극적인 협력을 들 수 있다. 먼저, 우주분야를 살펴보면, 미국 위성이미지업체 플래닛 랩스(Planet Labs)는 자체 보유한 200여개 인공위성을 통해 확보한 우크라이나 전역의 지상 상황을 종합하여 미 국방부에 제공하였다. MDA사와 블랙스카이 테크놀로지 사, 맥사(Maxar) 테크놀로지 사 등도 이와 유사하게 실시간 인공위성 정보를 미국 또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직접 제공함으로써 러시아 군의 동태와 정황을 거의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한겨레, 2022). 아울러,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사가 자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망인 ‘스타 링크’를 이용해 인터넷망이 파괴된 우크라이나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조선일보, 2022). 심지어,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리나라 SI 이미징서비스(SIIS)사에 대해 러시아군 동태 파악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주변국 이미지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조선일보, 2022).

사이버 분야도 대동소이하다. 지난 6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발간한 ‘MS 사이버전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쟁 이전인 2022년 1월부터 약 70여개의 우크라이나 정부 웹사이트에 대한 맬웨어(Malware) 공격을 감행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자체 개발한 맬웨어 보호 프로그램(Microsoft 365 Defender Endpoint Detection)을 배포하여 이를 무력화시켰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전쟁 이전부터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여 우크라이나를 무력화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2014년 크림 전쟁의 경험을 살려 상당한 수준의 사이버 방어 역량을 구축해 놓았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사 등 글로벌 IT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부 주요자료를 ‘클라우드(cloud)’로 사전에 이전하는 등의 노력으로 상당부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CIO, 2022).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우주와 사이버 분야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사전 준비와 함께 글로벌 IT 기업을 포함하는 민간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시켰고 현재까지 러시아의 군사적 침공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 주요 시사점과 정책 제언

1) 적정 수준 이상의 국방예산 확보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주변국 폴란드와 체코, 발트 3국뿐만 아니라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 주요국, 더 나아가 미국과 일본, 한국, 호주 등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인 국방예산 확대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6월 29일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동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함과 함께 나토 회원국들이 자국 국방예산을 2024년까지 GDP의 2%로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KBS News, 2022). 지난 7월 11일 일본 기시다 총리도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압승한 후 2023년부터 5년 이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22).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일본 국방예산은 2022년 5조 4500억엔(약 51조원)으로 GDP 대비 0.96%에서 2027년까지 GDP의 2% 수준인 약 11조원(105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한 우리나라 국방예산의 확대 편성 추세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54.6조원이며, 최근 10년(2013~22)간 연평균 4.7%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국방부, 각년호). 국방부 보도자료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국방비는 향후 5년(2021~25)간 총 301조원 규모로 2025년에는 60조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한국국방연구원(2021)에 따르면, 2036년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2021년 52.8조원 대비 79% 증가한 94.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 추세로 국내 경제상황은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이 점증되는 상황에서 첨단무기 개발과 이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 이상의 국방예산 확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북한 핵, 미사일 대비 열위로 평가되는 3축체계 조기 구축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및 우주, 사이버 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 수송, 보급, 탄약 등 주요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

미국과 나토, 우방국들의 강력한 대 러시아 경제, 금융, 방위산업 제재와 러시아 무기체계의 글로벌 신뢰도 저하 등으로 향후 글로벌 방산시장에서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폴란드, 발트 3국 및 나토 주요국들의 대규모 무기구매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러시아 무기를 주로 수입해왔던 인도, 중동, 알제리 등의 무기 수입선 다변화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계기로 러시아의 주요 무기수입국인 인도, 중동, 동남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1위 무기수출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중국의 대미 무기수출 견제와 러시아 무기수입선의 자국 대체 노력도 주목해야 할 요소 중 하나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무기체계의 가격경쟁력 뿐만 아니라 성능과 품질, 후속군수지원에서의 역량 제고가 긴요할 전망이다. 또한, 수년 내 GDP 대비 2% 이상 국방예산 증액을 선언한 독일과 일본 등도 자국 방위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국방 연구개발 투자와 첨단 무기체계 개발, 생산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수년 내 글로벌 방산수출 3, 4위 강국 대열 진입을 노리는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조선비즈, 2022). 실제로, 폴란드 정부는 지난 7월 28일 한국과 K-2 전차 980대, FA-50 경공격기 48대, K-9 자주포 648대를 포함하는 10조원대 이상의 기본계약(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했으며, 2030년까지 최대 25조원에 이르는 무기 수출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더 퍼블릭, 2022). 지난 10여년간 높은 가성비와 충분한 기술이전, 안정적인 후속군수지원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준 대한민국 방산수출의 장점을 살려 수 년 내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과 범정부적 수출 지원 노력이 확대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3) 주요국과의 방산협력 확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동맹이 없는 중·후발국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동맹관계 설정과 자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스웨덴과 핀란드는 NATO 가입협정서에 서명하였으며, 영세중립국인 스위스마저 나토 가입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위협이 가장 높은 대만(Taiwan) 역시 자국 국방예산 증액과 함께 방위산업 역량 확대에 고심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유사한 입장에 처한 글로벌 방산 중·후발국들을 중심으로 자국 방위산업 역량 제고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따라, 중·후발국 입장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주요 무기체계를 자체 개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국가들과의 방위산업 협력 요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나라도 주요 중·후발국들에 대한 방산수출확대 정책과 연계하여 방위산업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후발국이 희망하는 자국 방위산업 역량 제고와 연계한 기술이전, 현지생산, 산업협력(절충교역), 공동개발·생산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우방국과의 방위산업 공급망 강화

미중 전략경쟁(Great Power Competition)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의 우방국간 심화(ally-shoring) 현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쳐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5월 한미 정상간 합의된 양국간 상호국방조달협정(RDP-MOU)에 대한 체결 노력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 국방부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을 계기

로 RDP 체결 주요국들과의 방산공급망 강화 노력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한미 정상간 합의한 RDP-MOU 체결은 양국간 동맹 강화와 공급망 확대, 공동개발·생산(제조)을 포함하는 방위산업 협력에 필수불가결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은 2021년 영국, 호주와 AUKUS를 신설, 호주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핵추진잠수함 기술이전을 약속했으며, 최근에는 극초음속 유도무기, 유무인 전투기(Royal Wingman) 개발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향후 한미 RDP-MOU 체결을 통해 방위산업 공급망 중 반도체, 배터리, 5G 등 일부 비교우위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주, 사이버, 무인이동체, 주요센서류(All in One Sensor) 등 비교열위 분야에서 미국과의 공동개발·생산 확대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RDP 주요국들인 영국, 호주, 일본 등과의 3자, 4자 협력도 병행함으로써 유사시 방위산업에서의 글로벌 공급망 역량을 한층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민군간 협력 활성화

마지막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전쟁 상황에서의 민군간 협력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도 커다란 숙제다. 특히, 우리나라 무기체계 중 가장 경쟁력이 저조한 분야로 평가되는 우주와 사이버 분야에 민군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우주기업과의 영상정보 공유 및 분석을 확대하여 이에 대한 전력 공백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사시 현재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망을 대체할 수 있도록 국내외 관련 민간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물리적 ‘망분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내 군 사이버 보안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북한 등 주변국들의 전·평시 구분없는 사이버 공격에 적극 대응하여 국방부 및 정부 주요부처의 핵심자료들에 대한 클라우드 방식 적용 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실질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국방부, 국방예산 보도자료, 각년호

국제뉴스, ‘시험비행하는 대만전투기’, 2022.7.6.

글로벌비즈, '독일, 군사력 강화에 132조 7,500억원 투입', 2022.6.2.

나우뉴스, '러 미사일 황당 오작동... 발사 후 하늘서 U턴해 발사지 타격', 2022.6.25.

나우뉴스, '미, 대만에 올 들어 4번째 무기 판매... 중 '계절마다 '보호세' 납부 조롱', 2022.7.16.

뉴시스, "나토30개국, 스웨덴, 핀란드 가입 '초청'에 대한 의회 비준 개시, 2022.7.5.

더 퍼블릭, '폴란드, K-2 전차 등 한 무기 10조원 수입... 14조원 이상 추가 구매계획도', 2022.7.25.

데일리안, '경기 후퇴 우려에도 'K방산'은 뜬다...'나홀로' 성장 기대하는 이유, 2022.7.15.

반길주, '국제질서의 향방과 과제: Why and How ?', 산업연구원 방위산업 세미나 발표자료, 2022.5,

서울신문, 'K 방산, 폴란드에 10조원대 수출', 2022.7.28.

세계일보, 'K 방산, 폴란드 수출 최대 20조 책뎀... "신중한 접근" 관측도, 2022.7.28.

연합뉴스, '기시다, 아베 뜻 이어받아 개헌 등 난제 풀어가겠다', 2022.7.11.

이투데이, '핀란드, 스웨덴, 동시 나토가입 임박... 다시 그려지는 유럽 안보지도', 2022.5.13.

장지홍 외,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전망(2021)', 한국국방연구원, 2021.12.

조선일보, '대통령실, 폴란드 방산수출, 윤 대통령 정상회담 첫 성과될 것', 2022.6.30.

조선일보, '독일, 일본의 군사 대국화... 미 "신뢰한다" 공개지지', 2022.6.18.

조선일보, '우크라이나 참상 알린 맥사 테크놀로지, 커지는 민간 위성기업 시장', 2022. 3. 18.

파이낸셜 뉴스, '폴란드 국방장관, 한국산 K2전차 180대, FA-50 전투기 48대 구매', 2022.7.22.

한겨레, '나무 밑 숨은 탱크도 식별... 민간 정찰위성에 추적당하는 러시아군, 2022.5.2.

한국일보, '미국 하원, '주한미군 현원유지' 국방수권법안 처리', 2022.7.16.

홍규덕 외,(202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한국의 국방혁신, 로얄컴퍼니.

CIO, '러는 교묘했고 우크라는 잘 견뎌다', MS 사이버전 보고서, 2022.6.30.

KBS 뉴스, '스웨덴, 핀란드 가입... 나토 더 커지고 강해진다', 2022.6.29.

SIPRI-KIET Zoom 세미나 인터뷰 결과, 2022.7.19.

U.S. DoD, 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 2022. 3. 28.

Defense News, 'Pentagon tech chief seeks to bolster R&D work with allies', 2021.11.9.

Wezeman. P.D. et al.,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 2021', SIPRI Fact Sheet, 2022.3.

<https://news.yahoo.co.jp/articles/98ae74806771e99e403f11efe9eeaa88e765c1c8/images/00> (검색일: 2022년 7월 27일)

Abstract

Prospects and Implications of Global Defense Industry Reorganization after the Russia-Ukraine War

Jang, Won Joon

The paper examines the major changes in the global defense industry following the Russia-Ukraine War last February. In terms of global defense industry, a wide range of changes are expected, which are far different from the existing global order.

First, Many NATO and Indo-Pacific countries are scrambling to increase their defense budgets. Second, Russia, the world's second largest defense exporter, is expected to suffer from sanctions on the economy, finance and defense fields both U.S and other allies. Depending on which country fills the gap in the supply of weapons first, the status of global arms exporters is also expected to change significantly. Third, efforts to secure self-defense capability of middle and late developing countries, which saw that they could not avoid a "Second Ukraine" situation without having their own defense industry capability, are expected to expand their issue of establishing strategic cooperation with allies and other strong defense capability countries. Fourth, it is expected to cooperate defense supply chains with allies and partners after Ukraine War in the era of Great Power Competition. Finally, the need to utilize private sector capabilities especially in multi domain operations including cyber and space, is also expected to increase under the 'Total War' shown by the Russia-Ukraine War.

The paper also presents five policy suggestions through the main implications fo the Ukraine War. First, it is essential to secure a defense budget above an appropriate level to respond to military threats from neighbouring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Three-Axis' system, which is considered inferior to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ISR, C4I, and cyber capabilities and other combat support materials. Second, Russia's sanctions on arms exports are a great opportunity for Korea, which aims

to enter the global 'Big Four' arms exporters within few years. More active government support and pan-government export support efforts needed to achieve the goal with the use of cost-effectiveness, sufficient technology transfer, and stable follow-on support to arms buyers over the last decades. Third, Korea should strengthen mid to long-term defense industry cooperation in connection with defense exports to major middle and late developing countries with technology transfer, industrial cooperation, and joint development/production. Fourth, Korea also needs to expand supply chain cooperation in some areas of comparative advantage such as semiconductors, batteries, and 5G among the defense industry by signing ROK-US RDP-MOU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focus its capabilities on expanding joint development/production with the United States in comparative inferior fields such as space, cyber, unmanned vehicles, and major sensors. If necessary, it is necessary to further supplement the supply chain capabilities in the defense industry in case of emergency by making efforts to strengthen the three-way and four-way supply chain with major RDP countries such as the UK, Australia, and Japan.

Finally, how to strengthen civilian-military cooperation in the war situation shown by the Russian-Ukraine war is also a big task for u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rengthen civilian-military cooperation in the space and cyber sectors, which are considered the least competitive among weapons systems.

Vol. 5 No. 3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경원

편집위원(가나다순)

김경원

김대중

박종현

배기형

백승준

변재문

신원문

이덕로

이태환

이희수

이희찬

발행처 | 세종연구원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132길 15 세종연구원

전화 | 02-499-5765

인쇄일 | 2022년 06월

발행일 | 2022년 06월



“철저한 위생관리, 안전한 제품생산,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더불어 국제적인 식품안전 기준인 HACCP을 통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의 공급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육가공 선도적 기업

(주)코빅푸드는 최첨단 생산설비, 선진의 육가공 기술, 체계적인 품질관리, 효율적인 경영시스템 등을 통하여 한국의 축산물 수입, 생산, 유통시장에 있어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유해 왔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에 기여하는 기업

식생활 문화의 발달로 인하여 안전한 식품 및 고품질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한국시장에서 코빅푸드는 한국의 축산물 공급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대형 유통업체, 패밀리 레스토랑, 호텔, 식자재 기업,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에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 하고 있습니다.

[주]케이티에스씨



(주)KTSC(구.한국관광용품센터)는 1972년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무분별한 식자재의 개별 수입으로 인한 외화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주관으로 모든 관광호텔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수입 식자재 유통 전문회사입니다.

KTSC가 직수입한 다양한 카테고리의 최고의 프리미엄 식자재를 온라인 쇼핑몰 ekts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의 호텔 및 외식업체 공급
육류, 수산물, 가공식품 및 신선 채소를 비롯한 3,000여 종의 다양한 식자재



전국 유통망 구축. 신속한 배송
4,000여평 규모의 KTSC 물류센터와 본사, 전국 지사, 종합물류센터 연결



Total Food System
한 곳에서 구매하여 일괄 배송을 실시하는 One Stop Shopping



Online store
ekts.com
besva.com

www.kts.co.kr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636
TEL (02)2204-5900/5800
FAX (02)452-7294

세종대학교

세상 世 으뜸 宗



2022 QS 아시아 대학평가
아시아 TOP 1%

2022 Leiden 세계대학평가
5년 연속 국내 일반대학 1위

2022 THE 세계대학평가
국내 8위

세종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2022. 09. 14(수) ~ 09. 17(토)

모집전형

학생부교과 : 지역균형, 농어촌학생, 국방시스템공학, 항공시스템공학

학생부종합 : 창의인재(면접형), 창의인재(서류형), 고른기회, 사회기여 및 배려자,
서해5도학생, 특성화고교졸 재직자

논술우수자 : 인문계열, 자연계열

실기우수자 : 무용과, 영화예술학과

예체능특기자 : 체육학과, 무용과, 영화예술학과



세종대학교

UNINOMIC REVIEW

VoL. 5 No. 3

Russia-Ukraine War & Strategy of Korea

Russo-Ukraine War: Causes, Effects, and its Implication

Kyeong Ho SON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Ukrainian War

Kyu-chul KIM

Evaluation and Prospect of Ukrainian War and Korea

Sang Nam PARK

Korea's Economic Security Strategy

Won JOO

Ukraine Crisis, Reorganization of World Order, and Korea's
Response Strategy

Seun Rae KIM

Prospects and Implication of Global Defense Industry
reorganization after the Russia-Ukraine War

Won Joon JANG

